

정책연구  
2019-10

# 청년 삶의 질 연구(II)

-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

김유빈 · 강민정 · 고영우 · 김영아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김유빈) ..... 1
제2장 청년의 빈곤실태와 삶의 질 개선방안 연구 .....	(김유빈) ..... 7
제1절 청년의 소득 빈곤 현황 .....	8
제2절 청년의 소비지출 격차 현황 .....	18
제3절 요약 및 소결 .....	23
제3장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	(강민정) ..... 28
제1절 서 론 .....	28
제2절 최근 청년여성의 변화에 대한 고찰 .....	30
1. 청년층 내 성별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30
2. 청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성별 차이 .....	33
제3절 청년여성의 일자리와 삶의 질 특성 분석 .....	37
1. 분석 개요 .....	37
2. 청년층의 성별 일자리 특성 .....	38
3. 청년층의 성별 삶의 질 특성 .....	42
4. 청년여성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	48
제4절 결론 및 함의 .....	51

제4장 청년층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비교를 중심으로 ..... (고영우) .....	53
제1절 문제제기 .....	5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4
1. 이직성과를 설명하는 제이론 .....	54
2. 청년층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	58
3. 고졸 취업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	60
제3절 청년층 취업자의 지역이동경로 특성 .....	62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	62
2.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	65
제4절 청년층 첫 직장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 .....	69
제5절 소 결 .....	74
제5장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가족형성 : 초혼이행, 결혼 및 출산의향 .....	76
제1절 선행연구 .....	76
1. 고용과 청년의 초혼이행 .....	76
2. 고용과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의향 .....	79
제2절 연구방법 .....	81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	81
2. 변수 측정 .....	86
제3절 분석 결과 .....	92
1. 결혼이행 .....	92
2. 결혼 및 출산의향 .....	98
제4절 소 결 .....	104

제6장 요약 및 결론 .....	(김유빈) .....	108
-------------------	-------------	-----

참고문헌 .....		114
------------	--	-----

## 표 목 차

<표 1- 1> 청년층 고용지표 변화 추이(2018. 11~2019. 10) .....	2
<표 1- 2>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변화 추이(2015~18년) .....	3
<표 1- 3> 청년층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1998~ 2017년) .....	4
<표 2- 1> 한국노동패널조사 소득/지출항목 구성 .....	10
<표 2- 2> 가구형태별 청년인구 분포(2009~16년) .....	11
<표 2- 3> 청년층 소득변화 추이, 가구형태별(2009~16년) .....	12
<표 2- 4> 전체인구 균등화 중위소득 및 빈곤선 .....	13
<표 2- 5> 청년층 상대적 빈곤율 변화 추이, 가구형태별 (2009~16년) .....	14
<표 2- 6> 청년층 가구형태별 취업률(2009~16년) .....	15
<표 2- 7> 청년층의 빈곤 이행 .....	16
<표 2- 8> 청년층 10분위 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2009~16년) .....	17
<표 2- 9> 한국노동패널조사 소비지출 관련 항목 .....	19
<표 2-10> 청년 월평균 균등화 생활비 실질지출 현황(2009~16년) ...	20
<표 2-11> 청년층 총소득 대비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 (2009~16년) .....	21
<표 2-12> 전체 인구 균등화 평균 및 중위 소비지출액 및 중위 소비지출액의 50% .....	21
<표 2-13> 청년층 상대적 지출빈곤 변화 추이, 가구형태별 (2009~16년) .....	22
<표 2-14> 총소비 기준, 청년층 10분위 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2009~16년) .....	23

<표 2-15> 빈곤여부에 따른 만족도(가족관계) 현황(2009~16년) .....	26
--	----

<표 3- 1>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	34
<표 3- 2> 조사대상 기초통계: 성별 평균 연령 .....	38
<표 3- 3> 성별 업종 분포(대분류) .....	39
<표 3- 4> 성별 사업체 규모 분포 .....	40
<표 3- 5> 성별 종사상 지위 .....	40
<표 3- 6> 성별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	41
<표 3- 7> 성별 현재 일자리 적응 시 어려움 있었는지 여부 .....	41
<표 3- 8> 현재 일자리 적응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42
<표 3- 9> 성별 주택 거주형태 .....	43
<표 3-10> 성별 학자금 대출 현황 .....	44
<표 3-11> 성별 대출금 잔액 및 부담정도 .....	44
<표 3-12> 성별 학자금 대출상환 현황 .....	45
<표 3-13> 성별 결혼의향 .....	46
<표 3-14> 성별 비혼 이유(1순위) .....	47
<표 3-15> 삶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성별 만족도 .....	48
<표 3-16>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	49
<표 3-17> 청년 임금근로자의 삶 만족도에 대한 서열로짓 분석 결과 .....	50

<표 4- 1> 지역별 특성화고 학교 수 및 학생 수(2015년) .....	63
<표 4- 2> 전문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	64
<표 4- 3>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	66
<표 4- 4>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 이동경로 .....	67
<표 4- 5>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별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	68
<표 4- 6> 첫 직장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선형확률모형) .....	71
<표 4- 7> 시도별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 성별 비교(선형확률 모형) .....	72

<표 4- 8>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 성별 비교(선형확률 모형) .....	73
<표 5- 1> 청년 개인별 에피소드 분포: 이행분석 사용 개인-기간 (person-period) .....	83
<표 5- 2> 결혼이행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	87
<표 5- 3> 결혼이행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	88
<표 5- 4> 결혼 및 출산의향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	89
<표 5- 5> 결혼의향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	90
<표 5- 6> 출산의향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	91
<표 5- 7>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OR(남성) .....	92
<표 5- 8>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OR(여성) .....	96
<표 5- 9> 결혼의향 OR(취업자+미혼) .....	99
<표 5-10> 출산의향 OR(취업자와 미혼+기혼) .....	101
<표 5-11> 출산의향 OR(취업자와 기혼) .....	103

## 그림목차

[그림 3-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34
[그림 3-2]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35



## 요약

### 1. 서론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에 이은 청년 삶의 질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이다. 최근 청년고용의 양상이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용지표가 반영하는 청년고용의 양상과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취업여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더불어, 일자리의 불안정성에서 파생된 소득 및 지출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생활영역 전반에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를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지표가 나타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여건 외에, 청년층의 실 체감여건을 전반적 생활여건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상당 비중이 여전히 일자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생활 영역별로 세부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함의를 찾는 본 연구 시리즈는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2. 청년의 빈곤실태와 삶의 질 개선방안 연구

제2장은 청년의 빈곤실태 분석에 따른 삶의 질 개선방안 연구로, 청년층의 소득/소비지출 분배지표 추정을 통해, 이들 지표가 청년층의 생활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이 지속적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

년층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2,871만 원, ‘청년부부’는 3,727만 원,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2,687만 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는 3,34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가구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을 세 가지 균등화 기준소득(총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가 11% 내외의 빈곤율을, 청년부부가 1% 내외,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7.2~11.4%,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 속한 가구의 경우에는 12%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 빈곤율로 파악한 청년층의 빈곤실태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는 10분위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GE), 지니계수 등의 분배지표를 통해 살펴봐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 빈곤/분배 지표들이 추정에 있어 가구를 단위로 하는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기타 가구원의 취업 및 소득 현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취업여부나 혼인여부에 따라 독립을 늦추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분배지표가 청년층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가구를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 빈곤가구의 2016년 기준 가구당 취업률이 33%인 데 비해 청년 비빈곤가구는 5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분배지표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의 소비지출 빈곤실태 역시 이와 상황은 유사하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청년층의 소비지출 실태는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이 2016년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구형태별로는 청년부부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상대적 지출 빈곤율은 2009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출빈곤율은 10% 내외로 소득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출수준을 유지하

여야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10분위배율이나,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등으로 살펴봐도 유사하다.

청년층의 빈곤실태가 분배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생활 불안정성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빈곤 여부를 통제하여, 청년층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전체에 있어 예외 없이, 빈곤 청년층의 만족도가 비빈곤 청년층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만족도 등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빈곤상태 지속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생활만족도의 하락은 추가적인 경제·근로유인 감소 및 사회관계 단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지원이 요구된다.

통용되는 빈곤 및 분배지표는 청년층의 실 생활여건 파악에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청년 생활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실 체감도를 반영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과 청년층의 육체적 건강 및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를 강화, 청년층과 해당 가구의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3.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제3장은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이다. 청년들은 일자리 획득이나 가족형성 과정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노력 외 가족 배경이나 젠더 등 통제 불가능한 조건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방향 및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전통적

인 성역할 분리의식을 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청년여성 중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 이전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수준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 및 일자리의 질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격차가 이들 삶의 만족도 및 향후 가족형성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청년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성별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성별효과를 고려하고, 채용 성차별 해소대책의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고유의 인사관리 권한인 채용절차를 정책적으로 관여하기 쉽지 않으나,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채용절차를 권고하되, 채용상 성차별 현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설계에 있어 미혼 및 비혼 청년여성들의 정책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수요가 존재하지만,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중점으로 한 기존 여성정책이 청년여성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세대갈등이나 젠더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부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한 단기 추진방안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문화형성을 통한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

#### 4. 청년층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4장은 청년층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청년층의 졸업 후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청년층의 지역이동을 고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있어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에 비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이 대부분 진학 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지역 선택에 있어서는 고용의 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의 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있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있어 일자리 질 측면이 담보되어야 지역이동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이동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5.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가족형성

제5장은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가족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청년의 가족형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하였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초혼이행과 결혼 및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세대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층의 초혼이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졸업 후 취업여부가 남녀 청년 모두의 초혼이행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졸업을 유예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가 초혼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의미한 졸업 유예 및 학생신분 유지가 결혼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 여부가 청년 남녀 모두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일자리 경험이 많고,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이 생애주기 전반에 있어 고용 지속성과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은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의 결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으나, 출산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의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의 선택에 있어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둔 남녀 청년의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취업 중인 미혼 및 기혼 청년들의 출산의향은 이들의 직업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짧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사규모가 클수록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근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직장 경력을 쌓은 후 출산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기혼 청년들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기혼남성의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근로조

건 중 하나인 근로시간이 기혼 청년남성들의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지연과 비혼에서 야기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 종료 후 안정적인 생애 첫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경력별 취업 및 전직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의 지속적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적 고용 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안정적 정착이 담보가 될 때, 결혼 및 출산 수행의 의향이 높아짐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육아 및 돌봄 지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보편적 여성 고용 모델의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기혼 남성의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첫 번째 시리즈인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김유빈 외, 2018)은 청년의 고용부진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힘든 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파급된 청년층의 삶의 질 악화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전제로 본 연구 시리즈의 연구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이 청년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이 다시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절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년 정책의 지원범위를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 제 1 장

###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에 이은 청년 삶의 질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이다.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은 한국 청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경제활동, 출산, 주거, 여가 및 문화, 자기계발 등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한국 청년고용의 양적 양상은 2018년 이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악화일로를 걷던 청년고용 추세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전선을 마주하며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청년들의 체감 실상은 이와는 괴리가 크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회복추세를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과 관계없이 청년들 개개인은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며 고용개선의 흐름에서 홀로 동떨어진 것 같다는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양상과 나아가 이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전반적 삶의 행태는 각종 지표가 나타내는 청년고용의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

언급하였듯이, 실제 청년 연령대의 각종 고용지표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청년 연령대의 주요 고용지표들은 2018년 이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지표의 이러한 회복추세는 <표 1-1>과 같이 최근 1년간의 월별 동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청년층 고용지표 변화 추이(2018. 11~2019. 10)

(단위: %, %p, 천 명)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		증감		증감
2018. 11	43.2	1.7	7.9	-1.3	3,932	95
2018. 12	42.7	1.0	8.6	-0.6	3,884	38
2019. 01	42.9	0.7	8.9	0.2	3,891	3
2019. 02	42.9	0.7	9.5	-0.3	3,906	20
2019. 03	42.9	0.9	10.8	-0.8	3,900	43
2019. 04	42.9	0.9	11.5	0.8	3,898	48
2019. 05	43.6	0.9	9.9	-0.6	3,953	45
2019. 06	43.2	0.3	10.4	1.4	3,920	-3
2019. 07	44.1	0.5	9.8	0.5	3,997	13
2019. 08	44.0	1.1	7.2	-2.8	3,983	63
2019. 09	43.7	0.8	7.3	-1.5	3,950	40
2019. 10	44.3	1.4	7.2	-1.2	3,998	90

주: 증감: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9년 10월 기준, 청년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한 44.3%, 청년실업률은 1.2%p 감소한 7.2%, 청년층 취업자 수는 90천 명 증가한 3,998천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 세부연령대의 고용률 변화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으로, 핵심근로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10월 기준, 25~29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한 71.5%이다.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청년층의 고용개선이 오직 양적 확충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체감실상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용보조지표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 등을 들 수 있다.

〈표 1-2〉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변화 추이(2015~18년)

(단위: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고용보조지표 3	22.0	22.0	22.7	22.8
실업자	397	435	435	408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69	78	80	86
잠재경제활동인구	623	590	627	633
경제활동인구	4,335	4,420	4,408	4,312
확장경제활동인구	4,958	5,010	5,034	4,9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상 체감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 3의 경우, 2015년 22.0%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2.8%를 기록하였으며, 월별로는 2019년 4월, 공표 이래 최고 수치인 25.2%를 기록한 바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청년실업률이 포괄하는 공식 실업자 외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sup>1)</sup>와 잠재경제활동인구<sup>2)</sup>를 포괄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여건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통계청 및 행정기관에서 생산·공표하는 공식통계 외, 청년층의 체감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지표로는 각종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및 행복도 문항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반영된 청년층의 전반적 삶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시리즈의 첫 번째 연구인 「청년 삶의 질 연구 I」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청년층의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생활만족도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 최근 두드러지는 고용지표와 청년체감도 간의 괴리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1)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 2) 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포괄하였다

〈표 1-3〉 청년층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7년)

	전 체	청년(15~29세)
1998	2.89	3.06
1999	2.95	3.10
2000	3.06	3.13
2001	3.09	3.18
2002	3.12	3.19
2003	3.21	3.30
2004	3.20	3.27
2005	3.24	3.29
2006	3.26	3.33
2007	3.29	3.35
2008	3.31	3.39
2009	3.37	3.42
2010	3.38	3.44
2011	3.39	3.44
2012	3.41	3.48
2013	3.40	3.46
2014	3.42	3.49
2015	3.44	3.49
2016	3.45	3.48
2017	3.44	3.46

주: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0차 98표본 원자료.

이 외, 청년층 취업 소요기간의 증가추세, 첫 일자리 근속기간의 감소 추세,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이직비중의 증가추세 등이 청년층이 체감하는 청년고용의 어려운 실상을 반영하는 지표들이라 볼 수 있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기준, 평균 12개월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추세에 있으며, 첫 일자리에 서의 근속기간은 19개월로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한 이직 및 퇴직비중의 증가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인한

퇴직은 퇴직사유 중 51.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층의 노동여건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정부가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상반된 시각으로 공존하고 있다. 최근의 청년고용 개선 흐름에 있어 정부의 청년정책 성과가 상당 비중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청년층이 존재하는 반면, 청년정책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 개선에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년층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청년층의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이들의 정책인지도와 수혜여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 정부의 중점 청년정책을 인지하고 있거나 실제 수혜 대상인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입요건 미달이나 정책에 대한 인지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의 고용 및 생활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계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여건 외, 실제 체감 실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전반적 생활여건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정책의 상당 비중이 여전히 일자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청년층의 생활여건을 삶의 영역·대상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 시리즈는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일자리의 영역에서 전반적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장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청년층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소득과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빈곤/분배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표가 청년층의 생활여건 및 세대 내 격차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비추어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3장은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이다. 2003년 이래 정부는 총 27건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정책은 161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청년층 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제3장은 청년여성 중 정

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년여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4장은 청년층의 졸업 후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대졸자에 비해 전문계고 졸업자의 공간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이동 연구는 이론적 측면으로나 정책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청년의 가족형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초혼이행과 결혼 및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세대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는 동시에,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 정책 시사점 및 방향을 제언한다.

## 제 2 장

### 청년의 빈곤실태와 삶의 질 개선방안 연구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청년층 고용지표와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생활 여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고용 회복의 여파가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미치기까지 시차(time lag)로 인해 즉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을 대표하는 각종 고용지표가 청년층의 실 고용여건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소득과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분배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표가 청년층의 실 생활여건 및 세대 내 격차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배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빈곤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제1절에서는 균등화 소득액을 기준으로, 제2절에서는 균등화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빈곤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지표에서 반영치 못하는 청년층의 심리적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제1절 청년의 소득 빈곤 현황

제1절에서 본 연구에 있어 주 분석대상인 청년층의 정의는 15~34세로, 공식 통계지표에 있어 통상 청년 연령대로 정의되는 15~29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대상 정책의 연령 요건인 34세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청년층이 속한 가구형태 분류는 1차 연구(김유빈 외, 2018)와 마찬가지로,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가구원, 기타 청년가구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청년가구는 청년 단독가구와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가구원 외 가구주가 청년이 아니며, 가구원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로 정의하였다.

청년 빈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추정에 있어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 이래, 가구 및 해당 가구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urvey)로, 소득, 자산 및 지출에 대한 자세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있어 적합한 분석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 모집단인 5,000가구를 구축된 98표본과 2009년 추가 표집된 가구와 당해 조사에 응답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통합표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제주도와 농가를 제외한 도시가구만이 표집된 98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 통합표본을 이용하도록 한다. 2019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현재 1차(1998년)~20차(2017년, 통합표본 9차)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통합표본 9차 기준 조사성공 가구 수는 7,066가구이며 응답 가구원 수는 1만 4,477명이다.

청년층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총소득,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이용한 빈곤율을 측정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빈곤율(poverty rate)은 특정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에 있는 인구 또는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빈곤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할 경우 절대적 빈곤율로, 대상 가구 및 인구의 소득분포 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를 빈곤선으로 지정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로 명명한다. 한국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전물량방식으로 산출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하였으나,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이후 최저 생계비 공표를 중단하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 중위소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율을 추정하는 데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분배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상의 소득관련 항목은 조사당해 전년도에 대해 조사하는 회고항목이다. 따라서, 가구형태와 소득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구형태는 전년도 소득을 조사한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차수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병합하였다. 예를 들어, 20차에 조사된 전년도(19차) 소득은 19차의 가구형태와 결합하여 이용된다. 더불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세후소득과 세전소득을 모두 조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배지표 추정에 있어 산출된 기준소득의 정의는 <표 2-1>과 같으며,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수혜금+사적 이전소득

총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기타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한국노동패널 20차 조사를 기준으로 가구형태별 청년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시, 2016년 기준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은 14.79%, 청년부부 2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3.01%, 청년 부부와 기타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5.87%, 그 외 청년이 가구원으로 속한 가구는 76.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이 구축된 2009년 이래 청년가구 형태의 시계열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한국노동패널조사 소득/지출항목 구성

변수명	응답항목(만 원)	세부 항목	총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h_2102	총근로소득	근로소득	+		+		+	
h_2112	은행등금융기관이자/투자소득	금융소득	+		+		+	
h_2113	사채등비금융기관이자수입		+		+		+	
h_2115	배당금		+		+		+	
h_2116	기타		+		+		+	
h_2122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소득	+		+		+	
h_2123	부동산매매차익		+		+		+	
h_2124	토지를 도지준 것		+		+		+	
h_2125	권리금		+		+		+	
h_2126	부동산소득기타		+		+		+	
h_2134	사회보험수혜금액 1	사회 수혜금	+					
h_2136	사회보험수혜금액 2		+					
h_2138	사회보험수혜금액 3		+					
h_2140	사회보험수혜금액 4		+					
h_2142	사회보험수혜금액 5		+					
h_2155	사회단체보조금	사적 이전소득	+		+		+	
h_2156	친척/친지보조금		+		+		+	
h_2157	따로 사는 부모님 도움		+		+		+	
h_2158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		+		+	
h_2159	그 외 친척/친지보조금		+		+		+	
h_2160	이전소득기타		+		+		+	
h_215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공적 이전소득	+				+	
h_2153	기타정부보조금		+				+	
h_4002	근로장려세제지원금		+				+	
h_2183	손해보험	기타소득	+					
h_2184	저축성보험		+					
h_2185	종신보험		+					
h_2186	퇴직금		+					
h_2187	증여/상속		+					
h_2188	축의금/조의금		+					
h_2189	당첨상금/상 상금		+					
h_2190	재해보상금		+					
h_2191	기타소득액수		+					
h_2328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공적					-	
h_2332	건강보험료	비소비지출					-	

주: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자산변동으로 구분, 금융소득에서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표 2-2〉 가구형태별 청년인구 분포(2009~16년)

(단위: 천 명, %)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2009	1,098	10.50	381	3.64	852	8.14	8,128	77.72	10,458	100.00
2010	1,143	10.47	480	4.40	907	8.31	8,388	76.83	10,918	100.00
2011	1,251	11.33	423	3.83	927	8.39	8,444	76.45	11,045	100.00
2012	1,326	12.02	353	3.25	882	8.11	8,304	76.43	10,865	100.00
2013	1,362	12.56	406	3.74	832	7.67	8,246	76.03	10,845	100.00
2014	1,465	13.59	411	3.81	761	7.05	8,144	75.54	10,781	100.00
2015	1,608	14.96	448	4.17	747	6.95	7,945	73.92	10,748	100.00
2016	1,472	14.79	299	3.01	585	5.87	7,599	76.33	9,955	10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하기에 앞서, 청년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앞서 정의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총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연도별 소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이다. 청년층의 균등화 실질소득은 세 가지 기준소득 모든 경우에 있어,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구형태별 비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 단독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2,871만 원, ‘청년부부’는 3,727만 원,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2,738만 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는 3,330만 원 수준으로, 청년부부의 균등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부부의 가구원 취업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3〉 청년층 소득변화 추이, 가구형태별(2009~16년)

a. 균등화 총소득 기준

(단위: 만 원)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2860.3	3986.5	2486.4	2938.1	2932.8
2010	2691.5	3873.1	2534.3	2933.3	2917.8
2011	2614.2	3556.7	2610.7	2988.0	2937.3
2012	2619.0	3559.8	2593.3	3029.3	2966.0
2013	2645.3	3660.4	2802.4	3192.3	3114.6
2014	2549.5	3105.6	2980.3	3255.3	3138.1
2015	2745.9	3701.1	2898.3	3330.9	3232.6
2016	2911.1	4097.5	2794.3	3490.2	3385.4

b.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2771.7	3722.1	2416.7	2793.0	2794.7
2010	2691.4	3819.0	2464.0	2820.8	2822.6
2011	2615.7	3493.6	2549.1	2860.2	2831.3
2012	2548.2	3485.0	2495.2	2943.1	2880.6
2013	2615.0	3620.1	2710.2	3032.4	2979.6
2014	2514.4	3032.7	2845.4	3148.1	3039.0
2015	2710.7	3659.3	2785.4	3184.5	3108.7
2016	2895.8	3735.5	2686.4	3343.7	3252.5

c.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2754.33	3704.32	2422.43	2786.8	2787.96
2010	2656.12	3804.58	2478.21	2804.79	2807.06
2011	2594.79	3476.46	2558.59	2853.06	2823.7
2012	2539.94	3469.63	2538.05	2930.79	2873.39
2013	2605.88	3602.67	2742.19	3024.39	2974.26
2014	2504.13	3018.2	2901.17	3134.27	3031.13
2015	2698.98	3643.45	2819.92	3176.11	3102.74
2016	2870.59	3726.55	2737.92	3330.33	3241.7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표 2-4〉 전체인구 균등화 중위소득 및 빈곤선

(단위: 만 원)

	총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중위	빈곤선	중위	빈곤선	중위	빈곤선
2009	2543.03	1271.51	2430.697	1215.35	2419.96	1209.98
2010	2625.16	1312.58	2541.433	1270.72	2526.06	1263.03
2011	2713.35	1356.67	2596.867	1298.43	2586.55	1293.27
2012	2815.60	1407.80	2737.914	1368.96	2738.43	1369.22
2013	2844.12	1422.06	2759.508	1379.75	2757.23	1378.61
2014	2989.99	1495.00	2900.361	1450.18	2907.16	1453.58
2015	3010.00	1505.00	2951.61	1475.81	2965.00	1482.50
2016	3117.76	1558.88	3000.891	1500.45	3003.37	1501.68

주: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한편, 상대적 빈곤율 추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별 빈곤선은 <표 2-4>와 같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9차를 기준으로 2016년 빈곤선은 총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1,559만 원, 시장소득으로는 1,501만 원, 가처분소득으로는 1,502만 원이다.

이에, 상대적 빈곤율은 위에서 정의한 전체 인구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가구유형별로 추정하도록 한다.

청년층 상대 빈곤율(%)=

$$\frac{\text{기준소득(균등화)이 빈곤선 미만인 청년층 인구}}{\text{청년층 인구}} \times 100$$

<표 2-5>는 기준소득을 달리하여 청년층의 가구형태별로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한 것이다. 청년 단독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기준소득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변화추이가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는 대체로 11% 내외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부부는 1% 내외,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기준소득에 따라 7.2~11.4%,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 속한 가구원의 경우에는 12% 내외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표 2-5〉 청년층 상대적 빈곤율 변화 추이, 가구형태별(2009~16년)

a. 균등화 총소득 기준

(단위: %)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10.51	3.83	12.57	13.21	10.21
2010	9.34	1.05	13.02	13.76	10.39
2011	14.46	5.02	12.05	13.10	10.11
2012	12.83	1.42	13.42	12.90	10.19
2013	10.13	3.94	9.28	12.91	9.57
2014	11.54	6.17	9.82	14.13	10.55
2015	13.76	0.69	8.15	11.47	8.71
2016	11.81	0.00	9.59	12.22	9.85

b.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9.56	3.83	14.16	12.77	10.17
2010	8.12	1.72	12.95	14.29	11.03
2011	12.67	3.50	13.53	13.53	10.66
2012	13.21	2.71	11.31	13.06	11.04
2013	9.85	6.89	7.90	13.26	10.38
2014	11.65	5.51	10.39	13.35	11.20
2015	12.65	0.68	10.80	12.80	10.25
2016	10.80	1.24	11.41	12.09	10.79

c.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9.52	3.83	13.39	12.84	10.09
2010	9.01	1.70	11.55	14.34	10.95
2011	12.72	3.20	11.86	13.21	10.46
2012	13.21	2.70	11.60	13.10	10.79
2013	10.21	6.37	8.22	12.68	9.91
2014	11.74	5.78	8.52	13.91	11.25
2015	12.98	0.68	9.52	13.29	10.25
2016	11.27	1.24	7.19	12.28	10.5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빈곤율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균등화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취업률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가구원의 취업률이 낮을수록 균등화 소득수준의 상대적 하락으로 빈곤율이 상승하게 되며, 본 효과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청년가구를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나누어 볼 때, 청년 빈곤가구의 가구당 취업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33%인 데 비해 청년 비빈곤가구는 57%에 이른다. 가구형태별로는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51% 정도가 빈곤가구에 해당되며, 비빈곤 독거 청년의 95%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 내 취업률의 비중이 타 가구에 비해 높음에도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혼자 거주하는 청년층의 상당비중이 저임금, 시간제 등 취약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의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빈곤가구의 취업률은 비빈곤가구 취업률의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구 내 취업자 수 및 비중이 빈곤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의 경우에도, 취업 전까지는 부모와 거주하다 취업 후 독립하는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부에 따라 해당 가구의 빈곤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단독가구에 비해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의 취업률이 낮은 것이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볼 수 있다.

〈표 2-6〉 청년층 가구형태별 취업률(2009~16년)

a. 빈곤가구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0.33	0.25	0.28	0.29	0.29
2010	0.31	0.50	0.30	0.28	0.29
2011	0.37	0.50	0.23	0.31	0.31
2012	0.44	0.33	0.27	0.31	0.32
2013	0.63	0.42	0.22	0.31	0.33
2014	0.59	0.40	0.22	0.31	0.36
2015	0.56	-	0.23	0.30	0.33
2016	0.51	-	0.26	0.30	0.33

〈표 2-6〉의 계속

b. 비빈곤가구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0.88	0.71	0.37	0.48	0.52
2010	0.91	0.67	0.38	0.49	0.53
2011	0.93	0.69	0.38	0.49	0.54
2012	0.95	0.64	0.39	0.50	0.55
2013	0.95	0.34	0.39	0.50	0.55
2014	0.94	0.66	0.38	0.50	0.55
2015	0.96	0.62	0.37	0.50	0.55
2016	0.95	0.71	0.38	0.51	0.57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빈곤 이행을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5~16년 기간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빈곤이행을 살펴보면, 빈곤을 유지하는 청년층은 53%, 빈곤을 탈출한 청년층의 비중은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탈출률은 분석기간 중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뚜렷한 추세를 살펴보기는 힘들다.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으로 진입하는 확률은 2015~16년 기간 기준으로 5.45%이며, 분석기간 전체에 있어서도 4.52~6.50% 수준에 머무른다.

〈표 2-7〉 청년층의 빈곤 이행

(단위: %)

	빈곤→빈곤	빈곤→비빈곤	비빈곤→빈곤	비빈곤→비빈곤
2009→2010	52.64	47.36	6.41	93.59
2010→2011	55.87	44.13	5.99	94.01
2011→2012	54.04	45.96	6.50	93.50
2012→2013	52.01	47.99	6.24	93.76
2013→2014	53.78	46.22	6.53	93.47
2014→2015	51.35	48.65	4.52	95.48
2015→2016	52.73	47.27	5.45	94.5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빈곤 현황을 앞서 추정한 상대적 빈곤율 외 10분위 배율과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으며, 각 분배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분위 배율=상위 10%의 평균 소득/하위 10%의 평균 소득

$$\text{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omega_i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text{지니계수} = \frac{1}{\mu N^2} \sum_{i=1}^N \sum_{j=1}^N \omega_i |y_i - y_j|$$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omega_i$ 는 가중치,  $y$ 는 가구의 기준소득,  $\mu$ 는 기준소득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지수는  $\alpha$  값이 작을수록 하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며, 지수값의 범위는 0에서 무한대( $\infty$ )로 지수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와 균등화 가구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의미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선 사이에 위치한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며, 0~1 사이의 값을 가지되 0은 완전 균등상태를, 1은 완전 불균등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 분배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소득 10분위배율은 분석기간 중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3.8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는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0.3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니계수는 0.30 내외의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표 2-8> 청년층 10분위 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2009~16년)

	10분위배율	GE(2)	지니계수
2009	4.39	0.26	0.33
2010	4.40	0.21	0.31
2011	4.06	0.19	0.31
2012	4.07	0.19	0.30
2013	3.99	0.24	0.31
2014	4.03	0.20	0.30
2015	3.80	0.20	0.30
2016	3.80	0.32	0.32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GE(2):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이상과 같이, 각종 빈곤지표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의 빈곤 현황은 일견 심각치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이 40%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청년의 실업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해서<sup>3)</sup> 청년층의 빈곤율이 동일한 추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빈곤율과 10분위 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와 지니계수 등 앞서 살펴본 빈곤/분배 지표들은 추정에 있어 가구를 단위로 하는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기타 가구원의 취업 및 소득 현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취업 여부나 혼인여부에 따라 독립을 늦추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이 늘어가면서 해당 지표가 순수 청년층만의 빈곤 현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에서는 청년층의 소득빈곤 현황에 이어 청년층 내 상대적 경제활동 격차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제2절 청년의 소비지출 격차 현황

제2절에서는 제1절에 이어 15~34세 청년층을 분석의 대상으로, 소득 빈곤/분배지표 개념을 차용하여 이들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앞선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자료이다. 한편, 청년층의 소비지출 현황은 김유빈 외(2018)에서 연도별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최신 자료를 이용, 분석의 시계열을 확장하고, 빈곤/분배지표를 차용하여, 청년층 내 소비지출의 격차 심도를 분석하는데 분석의 목적이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소비항목은 소득관련 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당해 전 년도의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하는 회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을 구성한 바와 같이 가구형태와 소비현황을 구성하는 데 있

3) 분석기간인 2009~16년간의 추이를 의미하는 것임.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등 청년고용지표는 2018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9〉 한국노동패널조사 소비지출 관련 항목

소비지출 관련 항목	
월평균총액	통신비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외식비	자녀 용돈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그 외 가구원 용돈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현금 및 각종 기부금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난방비 등)	국민연금(및 의료보험료)
경조사비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보건의료비	대중교통비
문화비(TV 시청료, 취미·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생필품 구입비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기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김유빈 외(2018: 19) 재인용.

어, 해당차수의 가구형태와 지난 차수의 소비자료를 이용하여 병합하였다.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변수는 <표 2-9>와 같다.

소비 분배지표를 살펴봄에 앞서, 청년층 소비지출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지출액은 한국노동패널조사상의 월평균 총 생활비 지출액 항목과 소비항목별 액수의 총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월평균 총 생활비 항목의 소비지출액과 소비항목 총 합계액 기준의 소비지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소비항목의 총합기준 소비지출액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소비항목별 액수의 총합 기준으로 청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소비지출액이 170만 원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 단독가구의 소비액이 136만 원으로 가장 낮고,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의 소비지출액이 179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2-10〉 청년 월평균 균등화 생활비 실질지출 현황(2009~16년)

a. 월평균 총 생활비 지출액 기준

(단위: 만 원)

총 생활비 지출액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체 청년가구
2009	127.01	151.54	132.49	158.09	152.04
2010	134.74	159.85	134.35	164.67	158.00
2011	124.22	149.51	135.56	165.58	157.00
2012	124.60	147.39	134.84	165.31	156.89
2013	133.18	152.41	133.73	165.59	158.06
2014	129.66	141.94	136.73	167.42	157.70
2015	132.04	158.10	131.74	174.64	165.52
2016	135.25	154.01	136.61	179.39	170.07

b. 소비항목별 액수의 총합 기준

생활비 합산액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체 청년가구
2009	128.62	153.22	134.34	159.57	153.58
2010	136.55	161.86	135.78	165.80	159.28
2011	124.92	149.45	136.30	166.64	157.92
2012	125.11	145.89	136.13	166.41	157.84
2013	133.97	152.41	133.16	166.04	158.41
2014	129.52	142.01	136.58	167.90	158.00
2015	133.57	156.36	131.55	175.68	166.40
2016	135.98	152.25	136.46	179.78	170.39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실질생활비 2015년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소비지출 현황을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살펴보기 위해, 위의 월평균 균등화 소비지출액을 12배 한 후 연평균 균등화 총소득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청년가구의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은 2016년 기준 6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형태별로는 청년부부의 지출액 비중이 45% 수준으로 가장 낮고, 청년이 속한 기타가구의 지출액 비중이 62%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 지출에 대비, 지출규모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의 경우 낮은 가구원 취업률에 따라 균등화 총소득액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1〉 청년층 총소득 대비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2009~16년)

(단위: %)

총 생활비 지출액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체 청년가구
2009	53.96	46.12	64.84	65.17	62.84
2010	60.88	50.15	64.29	67.83	65.51
2011	57.34	50.42	62.65	66.92	64.52
2012	57.32	49.18	62.99	65.92	63.86
2013	60.77	49.97	57.02	62.42	61.03
2014	60.96	54.87	54.99	61.89	60.42
2015	58.37	50.70	54.47	63.29	61.77
2016	56.05	44.59	58.60	61.81	60.40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청년층의 상대적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인구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액의 평균, 중위값, 중위의 50% 값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실질 총소비지출액의 평균 및 중위값은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는 평균값이 160만 원, 중위값은 148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지출규모에 적용하기 위해 살펴본 소비지출액 중위의 50% 값은 74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2〉 전체 인구 균등화 평균 및 중위 소비지출액 및 중위 소비지출액의 50%

(단위: 만 원)

	총소비 지출액		
	평균	중위	중위의 50%
2009	143.37	131.15	65.58
2010	148.33	136.97	68.49
2011	148.46	137.78	68.89
2012	148.37	139.62	69.81
2013	149.42	137.69	68.85
2014	150.66	140.49	70.25
2015	155.32	144.34	72.17
2016	159.64	147.77	73.89

주: 총소비 지출액: 소비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표 2-13〉 청년층 상대적 지출빈곤 변화 추이, 가구형태별(2009~16년)

(단위 : %)

	청년 단독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	전 체
2009	4.10	-	2.84	5.09	4.47
2010	6.93	0.92	5.09	5.12	5.03
2011	12.05	1.21	1.81	4.07	4.45
2012	10.14	-	2.94	4.24	4.53
2013	6.96	0.66	0.38	4.19	3.91
2014	5.99	2.63	0.76	4.56	4.25
2015	3.71	-	1.67	3.59	3.31
2016	6.68	-	0.45	3.62	3.63

주: 총소비 지출액: 소비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표 2-13〉은 소득의 상대적 빈곤개념을 차용,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체 인구 소비지출 분포 중위값의 50% 이하인 청년층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청년층의 상대적 지출 빈곤율은 2009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청년층의 소득빈곤율이 1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지출빈곤율은 이에 대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의 지출빈곤율이 6.6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부부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상 지출 빈곤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지출 빈곤현황을 앞서 제1절과 같이 10분위배율과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2-14〉와 같다. 10분위 배율과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로 살펴본 청년층의 지출빈곤 현황은 소득 빈곤현황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지출 10분위배율은 2.74,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는 0.1, 지니계수는 0.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4〉 총소비 기준, 청년층 10분위 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2009~16년)

	10분위배율	GE(2)	지니계수
2009	2.95	0.11	0.24
2010	2.91	0.11	0.24
2011	2.83	0.11	0.24
2012	2.81	0.11	0.23
2013	2.82	0.10	0.23
2014	2.73	0.09	0.22
2015	2.70	0.09	0.22
2016	2.74	0.10	0.22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GE(2):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종합하면, 청년층의 상대적 지출빈곤 현황은 소득빈곤 현황과 마찬가지로 분배지표에 있어 일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소비의 경직성으로 인해 낮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소득하위 계층의 경우 향후 소득 빈곤층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제3절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가구형태별 분배지표를 추정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기준소득에 따라 변화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청

년 단독가구의 경우 11% 이외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부부는 1% 이외,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기준소득에 따라 7.2~11.4%,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 속한 가구의 경우에는 12%의 이외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상대적 빈곤율로 살펴본 청년층의 빈곤실태는 최근 심각한 우려를 더해가고 있는 노인빈곤율은 물론, 타 연령대의 상대적 빈곤율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10분위배율이나,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등 타 분배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아도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위 분배지표에 의한 청년빈곤 실태 파악은 청년층의 실 근로소득 분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배지표에 의한 빈곤율 파악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청년층만이 아닌 타 가구의 취업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청년층만의 순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보기는 힘들다. 비빈곤 독거 청년의 95%가 취업자인 것이 이를 반영한다. 더불어,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청년층의 상당비중이 저임금, 시간제 등 취약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 전까지 부모와 거주하다 취업 후 독립하는 청년층을 의미하는 켄거루족의 증가 추세도 분배지표의 동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볼 수 있다.

청년층의 빈곤실태는 이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청년가구의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형태별로는 청년부부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 지출에 대비, 지출 규모를 억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상대적 지출 빈곤율은 2009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출빈곤율이 10% 이외의 수준으로 소득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출수준을 유지하여야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득분배지표와 마찬가지로, 10분위배율이나,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등 타 분배지표를 이용하



여 살펴보아도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볼 때, 청년층은 소비의 경직성으로 인해 낮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하위 계층의 경우 향후 소득 빈곤층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일자리 문제에서 야기된 청년층의 소득 및 지출 불안정성이 전반적 삶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빈곤 여부에 따른 이들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의 만족도 항목은 1~5(매우 만족~매우 불만족)까지의 서열형 변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서열척도를 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소득 및 지출불안정성의 생활만족도/행복도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 및 개인의 수입/지출 현황과 관계없는 가족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비빈곤층으로 분류된 청년층의 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세 종류의 만족도 모두 분석기간인 2009~16년에 전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득빈곤 청년층의 경우에는 만족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특히 2014년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만족도 차이는 분석기간 전체에 있어 세 종류의 만족도가 한번의 예외 없이, 빈곤 청년층의 만족도가 비빈곤 청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만족도 등 빈곤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상태 지속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생활만족도의 하락은 추가적인 근로유인 감소,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이들 청년층이 현재 상태에 비해 보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표 2-15〉 빈곤여부에 따른 만족도(가족관계) 현황(2009~16년)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만족도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2009	3.27	3.65	3.25	3.55	3.04	3.44
2010	3.30	3.68	3.26	3.55	3.10	3.52
2011	3.40	3.63	3.36	3.51	3.18	3.46
2012	3.43	3.68	3.36	3.53	3.20	3.49
2013	3.33	3.69	3.28	3.54	3.14	3.49
2014	3.39	3.70	3.36	3.53	3.19	3.52
2015	3.37	3.69	3.31	3.56	3.18	3.54
2016	3.36	3.72	3.29	3.59	3.17	3.54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GE(2):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 1~9차 원자료.

이상 살펴보았듯이, 통상 통용되는 빈곤 및 분배지표는 청년층의 실 생활여건을 파악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는 분배지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및 일자리 분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고용지표가 가지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식 고용 및 분배지표 외 청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생활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가구단위로 구성되는 현재의 통계지표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 및 생활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을 포괄, 청년층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설문응답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현재의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소득 및 지출에 있어 하위계층에 속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구직을 단념하거나,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파악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취약계층을 현재의 기준에 대비, 보다 다각적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 외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청년층 자신과 해당 가구의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중앙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위의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고용서비스 부문의 정책성과를 취업 및 구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층의 고용서비스 유입 및 연계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제 3 장

##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 제1절 서론

최근 고용부진과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 및 출산 세대라는 측면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청년층의 일자리와 출산 문제에는 노동시장 성격차와 일·생활 균형에서의 성격차 등 젠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고정관념과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는 최근 들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유리천장 지수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 그의 역작용으로 인한 여성혐오 등 젠더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난으로 인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젠더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의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층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크다. 마경희 외(2018)의 연구에서 만 19~5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중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남성은 50.5%로, 40대 18.4%, 50대 9.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30대는 38.7%).<sup>4)</sup>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남녀 19~59세

를 대상으로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66.1%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청년층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만나, 약자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대(연령대)의 특성과 성별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청년여성’이라는 대상은 청년정책과 여성정책(성평등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따라서 ‘청년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세대와 젠더라는 두 가지 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경험은 삶의 질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지 말라’고 주장하는 청년여성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존의 가치와 목적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현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평등 관점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주로 기혼 및 유자녀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미혼 여성 즉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크지 않다고 여겨져, 청년여성들은 여성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발표된 김창환·오병돈(2019)의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연구는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성별 소득격차의 주된 원인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있다’는 기존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이전인 20대 청년층의 성별 소득격차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인적자본 변인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후 2년 이내 노동소득의 성별격차가 19.8%로 나타나 미혼, 무자녀인 경우에도 상당한 성별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4)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88).

따라서 경단 이전 20대 여성들도 차별에 근거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할당 기제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3년부터 정부에서는 총 27건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모두 161개로 추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지원금제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주거, 생활수준, 결혼, 출산 등 삶의 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많은 청년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정작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보거나, 청년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혼 청년층에 있어 젠더 문제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심각하며 그 격차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현재 청년층의 젠더 차이와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년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청년여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최근 청년여성의 변화에 대한 고찰

### 1. 청년층 내 성별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다.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장기불황, 실업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미래 사회를 지탱해 줄 청년세대의 위상이 위태로워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삶의 가치나 목적, 이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세대의 특징을 포착하지 못함을 지적받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미 청년집단이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동질적 단일 집단이 아닌,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다분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하위 집단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분화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안주엽 외, 2016: 269). 따라서 향후의 연구 및 정책방향도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층은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적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로 불안감과 중압감이 매우 큰 시기이다(김영미, 2016: 3, Lothhaller, 2010: 109 재인용). 즉 청년기에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 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다. 2016년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김영미(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지우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젠더’로 보고 있다. 성역할 분리 프레이밍이 여전한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 부담은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어, 여성들을 열등한 근로자로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성은 생계부양자 역할로, 여성성은 모성으로 등치되면서 가족형성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로부터, 일자리 기회와 가족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와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김영미, 2016).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를 고려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는가? 청년여성들의 인식수준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오래된 숙제이지만 그동안 정책적으

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해온 적은 거의 없다. 현 정부 들어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정작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데 남성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남녀간의 갈등은 이를 전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경쟁구도 논리가 아니다. 공정을 실현하고 의무와 권리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남녀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인지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청년층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인이 바로 ‘젠더’이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세대갈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 내에서도 세대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인사관리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나 조직이 세대갈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녀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같은 세대 내 성평등 인식수준의 차이가 더 컸고, 높은 직급의 남성들과 낮은 직급의 여성들 간 인식격차와 차별에 대한 인지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외, 2019, 발간예정). 김영미(2016: 3)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 안전망이 부족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세대 간 불평등보다 세대 내 불평등이 큰 특징을 보인다.

미혼 청년층의 욕구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들의 미래의 결혼과 가족형성, 출산의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 관련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층 내 성별 차이나 젠더 격차 및 갈등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청년층을 다룰 때 ‘성별’을 핵심 인구학적 변인으로 활용하지만 성별로 다른 특성(일자리 특성, 가구 특성, 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남성과 전체 여성을 비교하고 있어 오히려 청년층 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즉, 기 존재하는 차별기제 속에서 형성된 성별에 따른 일자리 및 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로만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성별 특성으로 보는 것은 청년층 내 젠더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성별 차이를 고찰하되, 이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2. 청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성별 차이

청년층 전체에 대해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청년층 전체는 다른 세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지만 청년층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주엽 외(2016: 271)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높고, 연령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성아·정해식(2019: 100)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청년층 내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청년층 남녀 내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로만 분석했기 때문에, 일자리나 가족구성, 인적자본 수준 등의 특성을 통제하고 분석하거나 남녀를 각각 분석하여 청년층 내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기초분석 보고서』<sup>5)</sup>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 중에서는 29.3%인 반면, 여성 중에서는 32.8%로 여성이 약간 더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중에서는 절반 이상(58.9%)이 ‘결혼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37.1%였고 ‘결혼생활에 대

5) 만 15~39세 2,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 자신감이 없어서’(24.0%)와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17.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1〉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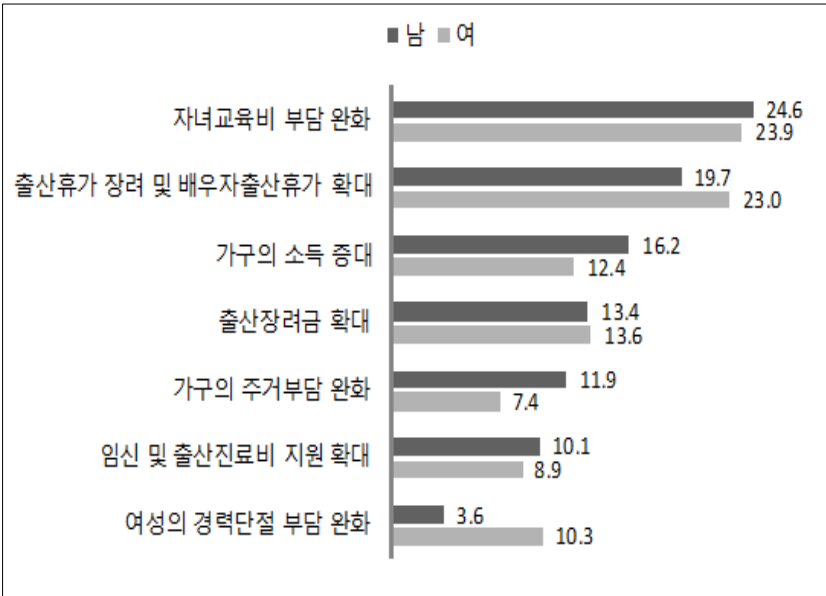
(단위 : %)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기타
전체	46.4	18.8	13.7	12.5	7.5	1.1
남	58.9	11.8	11.8	6.0	11.5	0.0
여	37.1	24.0	15.1	17.2	4.5	2.0

주: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자료: 김기현 외(2017: 40).

〔그림 3-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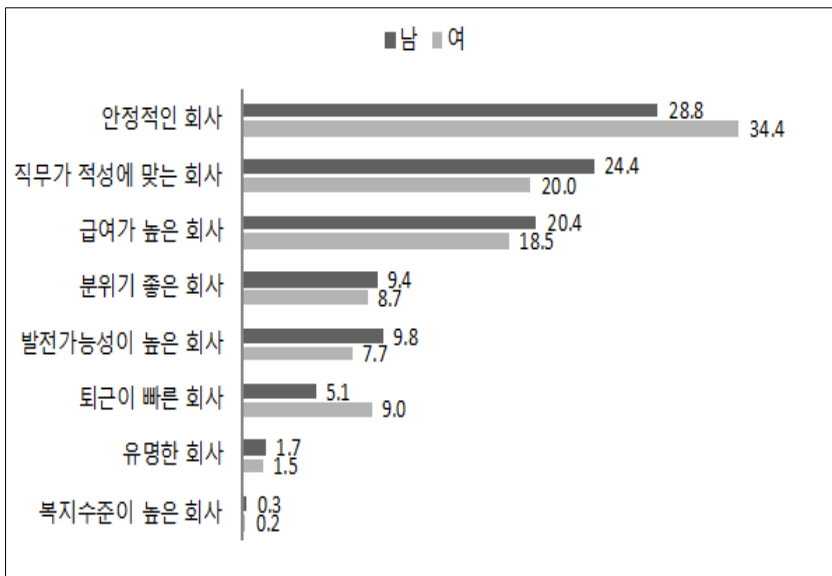
자료: 김기현 외(2017: 36).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남성 중에서는 63.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7.2%만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향후(2025년) 출산율 전망에서도 남녀 모두 70% 이상이 출산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였다(남성 중 75.8%, 여성 중 78.6%). 가장 먼저 확대되어야 할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여성 중에서는 ‘출산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3.0%)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성 중에서는 ‘가구의 소득 증대’(16.2%) 및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11.9%)가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층 내에서도 남성은 가구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여성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남녀 모두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특히 여성의 비중이 34.4%로 남성 28.8%에 비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24.4%)와 ‘급여가 높은 회사’(20.4%)가 여성보다 더 높았다.

[그림 3-2]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자료: 김기현 외(2017: 58).

이처럼 청년세대 남성은 경제력 확보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반면, 청년세대 여성은 일자리의 안정성과 결혼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여성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겪는 경험이 이런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행정연구원(2018)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여성의 삶의 질과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여성은 미취업 청년남성에 비해 일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훨씬 열악한 일자리에 처해 있으며, 노동시장 퇴출에 있어서도 청년남성에 비해 비자발적 퇴사가 많고, 한 번 미취업 상태로 빠지게 되면 재진입에도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 역시 청년여성들은 근로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학력, 역량, 전공을 고려할 때 미스매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노동이동 과정에 대해 분석한 조인숙(2015)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고용안정성 및 임금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또한 경력이동이 없는 일자리 이동은 남성대졸자의 임금수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대졸자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며, 노동이동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낮았다. 즉 청년여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청년층의 여성의 노동성과는 양적으로는 남성보다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남성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기에 얻는 일자리 기회가 향후 가족형성이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질이 낮은 것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은 이들이 경력단절 위기상황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젠더’라는 변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분석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제3절 청년여성의 일자리와 삶의 질 특성 분석

#### 1.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경력단절 위기 이전의 여성들, 즉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상황과 삶의 질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적 동질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청년층을 성별로 비교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일명 GOMS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매해 전년도 2~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약 1만 8,000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실시하며,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6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조사이다. 연령대는 정책대상인 만 34세까지, 경력단절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질적인 고용지위로 통제하기 위해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GOMS 패널은 기혼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sup>6)</sup> 미혼과 임금근로자만으로 구축한 분석대상은 총 1만 2,043명이며,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고 분석한다. 즉 본고의 분석대상은 대학졸업 후 1년 시점에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미혼 청년층이다. 연령은 모두 35세 미만이며, 25~30세 미만이 63.0%, 25세 미만이 34.3%이다. 남성은 군대기간이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25~30세 미만이 80.0%로 대부분이며, 여성은 25세 미만과 이상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평균 연령도 남성이 여성보다 2세 더 많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일자리 특성 즉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근로시간, 임금을 성별로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다. 그 외 현재 일자리 적응 시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초기 경험도 성별로 비교한다.

6) 2017년 조사대상자 18,199명 중 미혼 94.4%, 임금근로자는 70.0%.

〈표 3-2〉 조사대상 기초통계 : 성별 평균 연령

(단위: 명, %, 세)

		남성	여성	전체
25세 미만	수	1,022	3,108	4,130
	비중	15.6	56.4	34.3
25~30세 미만	수	5,224	2,364	7,588
	비중	80.0	42.9	63.0
30~35세 미만	수	285	40	325
	비중	4.4	0.7	2.7
전 체	수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평균		26.8	24.8	25.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일자리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형태 역시 중요하고, 청년층의 경우 학자금 대출 현황 역시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특성들이 삶의 만족도에 성별로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미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비혼을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통해 결혼 의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년층의 성별 일자리 특성

분석대상 청년 임금근로자의 업종분포를 대분류로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이 23.9%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교육서비스업 11.8%, 도매 및 소매업 9.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교육서비스업이 19.7%로 가장 비중이 높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 제조업 10.4% 순으로 남성과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표 3-3〉 성별 업종 분포(대분류)

(단위: 명)

업종	남성	여성	전 체
모름/무응답	4( 0.1%)	2( 0.0%)	6( 0.0%)
농업, 임업 및 어업	15( 0.2%)	6( 0.1%)	21( 0.2%)
광업	3( 0.0%)	2( 0.0%)	5( 0.0%)
제조업	1,563( 23.9%)	571( 10.4%)	2,134( 17.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 1.1%)	22( 0.4%)	94( 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5( 0.5%)	14( 0.3%)	49( 0.4%)
건설업	340( 5.2%)	101( 1.8%)	441( 3.7%)
도매 및 소매업	599( 9.2%)	454( 8.2%)	1,053( 8.7%)
운수 및 창고업	166( 2.5%)	79( 1.4%)	245( 2.0%)
숙박 및 음식점업	252( 3.9%)	331( 6.0%)	583( 4.8%)
정보통신업	504( 7.7%)	403( 7.3%)	907( 7.5%)
금융 및 보험업	228( 3.5%)	158( 2.9%)	386( 3.2%)
부동산업	49( 0.8%)	32( 0.6%)	81(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4( 9.1%)	518( 9.4%)	1,112( 9.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1( 3.8%)	266( 4.8%)	517( 4.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2( 7.2%)	273( 5.0%)	745( 6.2%)
교육 서비스업	773( 11.8%)	1086( 19.7%)	1,859( 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5( 4.8%)	914( 16.6%)	1,229( 1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4( 2.4%)	151( 2.7%)	305(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0( 2.1%)	125( 2.3%)	265( 2.2%)
국제 및 외국기관	2( 0.0%)	4( 0.1%)	6( 0.0%)
전 체	6531(100.0%)	5512(100.0%)	12,043(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사업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인 미만 종사자 비중이 남성 중에서는 7.3%인 데 비해 여성은 10.6%이며, 30인 미만으로는 남성 중 36.5%, 여성 중에서는 44.1%였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남성은 25.5%인데 비해 여성은 19.4%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이 차이가 큰 우리나라 특성상,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으로 진입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4〉 성별 사업체 규모 분포

(단위: 명, %)

사업체 규모	남성	여성	전 체
모름/무응답	329 5.0	377 6.8	706 5.9
1~4명	480 7.3	587 10.6	1,067 8.9
5~9명	691 10.6	766 13.9	1,457 12.1
10~29명	1,210 18.5	1,079 19.6	2,289 19.0
30~49명	557 8.5	432 7.8	989 8.2
50~99명	724 11.1	577 10.5	1,301 10.8
100~299명	876 13.4	626 11.4	1,502 12.5
300~499명	373 5.7	250 4.5	623 5.2
500~999명	393 6.0	306 5.6	699 5.8
1,000명 이상	898 13.7	512 9.3	1,410 11.7
전 체	6,531 100.0	5,512 100.0	12,04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표 3-5〉 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빈도	4,863	3,476	8,339
	비중	74.5	63.2	69.3
비정규직	빈도	1,667	2,021	3,688
	비중	25.5	36.8	30.7
전 체	빈도	6,530	5,497	12,027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69.3%로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남성 중에서는 정규직이 74.5%인 데 비해 여성 중에서는 63.2%로 나타나 청년층 역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초과근로를 포함한 주당 총 근로시간은 남성 45.6시간, 여성 42.1시간으로 남녀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이 넘었으며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근로시간 형태로는, 남성 중 5.8%가 시간제인 반면, 여성 중에서는 12.1%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 228.2만 원, 여성 185만 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은 81.0%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전체적인 남녀임금비가 같은 해(2017년) 61.3%에 비해서는 높지만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미혼 대졸 1년차 청년층의 성별 임금격차가 약 20%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성별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단위: 시간, 만 원, 명)

		주당 총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남성	평균	45.6	228.2
	빈도	6,531	6,531
여성	평균	42.1	185.0
	빈도	5,512	5,512
전체	평균	44.0	208.4
	빈도	12,043	12,0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19.6%였는데, 남성 중에서는 16.2%, 여성 중에서는 23.6%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여성들의 응답이 더 많았다.

〈표 3-7〉 성별 현재 일자리 적응 시 어려움 있었는지 여부

(단위: 명, %)

		성 별		전체
		남성	여성	
예	빈도	1,059	1,302	2,361
	비중	16.2	23.6	19.6
아니오	빈도	5,472	4,210	9,682
	비중	83.8	76.4	80.4
전체	빈도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표 3-8〉 현재 일자리 적응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업무내용습득	빈도	481	526	1,007
	비중	45.4	40.4	42.7
상사-동료와의 관계	빈도	236	352	588
	비중	22.3	27.0	24.9
적성, 흥미와 불일치	빈도	80	86	166
	비중	7.6	6.6	7.0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	빈도	152	203	355
	비중	14.4	15.6	15.0
차별(성, 학력, 지역 등)	빈도	8	14	22
	비중	0.8	1.1	0.9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빈도	15	9	24
	비중	1.4	0.7	1.0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빈도	23	30	53
	비중	2.2	2.3	2.2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빈도	62	82	144
	비중	5.9	6.3	6.1
기타	빈도	2	0	2
	비중	0.2	0.0	0.1
전 체	빈도	1,059	1,302	2,361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현재 일자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업무내용습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상사-동료와의 관계’였는데, 여성 중 27.0%로 남성 22.3%에 비해 더 높았다. 다음 순으로는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가 남성 14.4%, 여성 15.6%로 비슷하였다. 대학졸업 후 1년차이기 때문에 차별(성, 학력, 지역 등)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년층의 성별 삶의 질 특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20~34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가 17.6%를

〈표 3-9〉 성별 주택 거주형태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본인 소유의 집	빈도	350	226	576
	비중	5.4	4.1	4.8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소유한 집	빈도	2,759	2,810	5,569
	비중	42.2	51.0	46.2
전세	빈도	1,072	886	1,958
	비중	16.4	16.1	16.3
월세	빈도	1,608	1,341	2,949
	비중	24.6	24.3	24.5
기타	빈도	742	249	991
	비중	11.4	4.5	8.2
전 체	빈도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차지하며, 15~23세 1인 청년가구 중 자가비중은 4.6%에 불과한 등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김유빈 외, 2018). 청년들이 N포세대가 된 데에는 주거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대상 정책 등도 역시 결혼을 한 가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미혼 청년들은 여기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GOMS에서 나타난 주택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소유한 집인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월세가 24.5%, 전세 16.3% 순이었으며, 본인 소유의 집은 4.8%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월세나 전세 비중은 비슷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소유한 집’인 경우가 더 많아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51.0%).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28.3%가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1,217만 원이었다. 남성 중에서는 27.8%, 여성 중에서는 28.9%로 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금액 역시 남성 1,220만 원, 여성 1,215만 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직장생활 1년차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0〉 성별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대출 있음	빈도	1,817	1,593	3,410
	비중	27.8	28.9	28.3
대출 없음	빈도	4,714	3,919	8,633
	비중	72.2	71.1	71.7
전 체	빈도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대출 평균 금액(만 원)		1,220.0	1,214.7	1,217.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실제로 현재 대출금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약 989만 원이고 여성은 1,035만 원으로 학자금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잔여 상환금액은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조금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남성 중에서는 56.0%인 데 비해 여성 중에서는 73.1%로 여성들이 더 부담감이 큰 상황이었다. 평균 점수로는 남성 3.47점, 여성 3.91점으로 역시 여성이 더 높았다.

〈표 3-11〉 성별 대출금 잔액 및 부담정도

(단위: 만 원, 명)

		상환해야 할 대출금 총액	대출금상환 부담정도
남성	평균	988.8	3.47
	빈도	1,341	1,817
여성	평균	1,035.0	3.91
	빈도	1,249	1,593
전 체	평균	1,011.1	3.67
	빈도	2,590	3,4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표 3-12〉 성별 학자금 대출상환 현황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체
원금상환을 완료함	476 26.2	344 21.6	820 24.0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중	797 43.9	694 43.6	1,491 43.7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	197 10.8	138 8.7	335 9.8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지 않고 있음	347 19.1	417 26.2	764 22.4
전 체	1,817 100.0	1,593 100.0	3,41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이처럼 대출금 잔액과 상환부담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 당시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원금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남성 중에서는 26.2%, 여성 중에서는 21.6%로 남성이 더 높지만 남녀 모두 70% 이상이 아직 상환 중이었다. 게다가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지 않고 있음’은 남성 19.1%, 여성 26.2%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대출을 상환할 만한 금전적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연령대가 낮은 것도 있지만,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크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사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혼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간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는 63.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한 반면, 여성 중에서는 50.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의 조사결과보다 좀 더 낮은 수치이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응답이 여성 중에서는 10.5%인데, 남성 중에서는 4.9%였으며,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여성 7.6%, 남성 3.6%였다. 즉 남성 중에서는 확실하게 결혼의사가 없다는 비중이 8.5%인 데 비해 여성은 18.1%인 것이다.

〈표 3-13〉 성별 결혼의향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결혼할 생각이 있음	빈도	4,138	2,775	6,913
	비중	63.4	50.3	57.4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빈도	322	581	903
	비중	4.9	10.5	7.5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빈도	233	420	653
	비중	3.6	7.6	5.4
생각해 본 적 없음	빈도	836	790	1,626
	비중	12.8	14.3	13.5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모르겠음)	빈도	1,002	946	1,948
	비중	15.3	17.2	16.2
전 체	빈도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현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1,55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 역시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52.3%가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인 반면, 여성 중에서는 21.5%에 불과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혼사유는 비교적 다양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로 24.4%였는데 남성 중에서는 2.7%에 불과하였다. 여성들은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20.9%인 반면 남성은 5.8%로 모든 응답에서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는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26.8%로 여성 18.7%에 비해 높았다. 결국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어려워하는 반면, 여성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관으로 인해 비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결혼의사도 낮고 그 사유 역시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가치관에 의한 선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향후 미래세대의 가족형성에

〈표 3-14〉 성별 비혼 이유(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경제적 여유의 부족 (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	빈도	290	215	505
	비중	52.3	21.5	32.5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빈도	32	209	241
	비중	5.8	20.9	15.5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빈도	1	0	1
	비중	0.2	0.0	0.1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빈도	149	187	336
	비중	26.8	18.7	21.6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 아서	빈도	48	118	166
	비중	8.6	11.8	10.7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	빈도	15	244	259
	비중	2.7	24.4	16.6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빈도	5	3	8
	비중	0.9	0.3	0.5
건강, 장애 때문에	빈도	0	2	2
	비중	0.0	0.2	0.1
기타	빈도	15	23	38
	비중	2.7	2.3	2.4
전 체	빈도	555	1,001	1,556
	비중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과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관련한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의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해 7점 척도(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로는 남성 5.31점, 여성 5.03점으로 남성의 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다. 긍정적 응답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남성 중에서는 76.8%가 긍정적인 응답이었고 여성 중에서는 69.1%가 긍정적인 응답으로 이 역시 남성이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층 남성보다 여성이 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사한 특성으로 집단을 통제했을 경우(본 분석의 경우 대졸 1년 시점의 남녀 임금근로자) 오

〈표 3-15〉 삶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성별 만족도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62	59	121
	비중	0.9	1.1	1.0
2	빈도	108	150	258
	비중	1.7	2.7	2.1
3	빈도	338	473	811
	비중	5.2	8.6	6.7
4	빈도	1,006	1,017	2,023
	비중	15.4	18.5	16.8
5	빈도	1,928	1,659	3,587
	비중	29.5	30.1	29.8
6	빈도	1,932	1,496	3,428
	비중	29.6	27.1	28.5
7 매우 그렇다	빈도	1,157	658	1815
	비중	17.7	11.9	15.1
전 체	빈도	6,531	5,512	12,043
	비중	100.0	100.0	100.0
평균 점수		5.31	5.03	5.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히려 여성의 만족도가 더 낮다. 이는 일자리의 질이 여성이 더 낮고 부채 수준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4. 청년여성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대학 졸업 후 1년차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성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삶 만족도는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의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한 7점 리커트(Likert) 척도 응답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첫째, 인구학적 변수인



〈표 3-16〉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변수명	설 명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및 연령제곱	조사 당시 만 연령 및 연령제곱
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로그
종사상 지위	정규직=1, 비정규직=0
일자리 적응	일자리 적응에 어려움 있음=1, 없음=0
주택소유	주택 자가소유 및 가족 소유=1, 월세/전세/기타=0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있음=1, 없음=0
결혼의향	결혼의향 있음=1, 없음=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성별, 연령, 둘째, 일자리 특성 변수로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일자리 적응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미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생활 관련 변수로 주택소유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결혼의향을 포함하였다.<sup>7)</sup> 이상 독립변수들의 정의 및 조작방법은 <표 3-16>과 같다.

종속변수가 1점부터 7점까지 서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열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서열로짓모형은 누적확률(cumulative probability)에 대한 확률의 비로 해석되는데, 독립변수  $x$ 에서 종속변수의 순위가 특정 순위  $m$  이하일 때 누적확률 수식은 다음과 같다(방하남·이상호, 2006: 106).

$$Y = P(Y \leq m | x) = \sum_{\alpha=1}^m P(Y \leq \alpha | x) \quad m = 1, 2, \dots, n-1$$

다음 표는 서열로짓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추정된 계수들은 ‘삶 만족도’의 서열범주에서 한 단계 상위범주에 속하게 될 확률에 대한 해당 독립변수들의 추정효과를 나타낸다.

7) 인구학적 변수 중 출신지역과 일자리 변수 중 사업체 규모 및 업종은 가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삶 만족도가 더 높으며, 일자리 질이 높을수록(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삶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일자리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학자금 대출이 없고, 자가 및 가족소유의 주택이 있고 결혼의향이 있을수록 삶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녀로 나누어 각각 서열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적응의 어려움 여부, 학자금 대출 변인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종사상 지위는 남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여성은 정규직일수록 삶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통계적 유의도가 더 높은 반면, 자가 및 가족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여성의 통계적 유의도가 더 높았다.

종합하면, 삶 만족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경제적 수준이, 여성은 종사상 지위나 주택 소유형태 등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결혼의향이 삶의 만족도 수준과 매우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청년 임금근로자의 삶 만족도에 대한 서열로짓 분석 결과

변 수	전 체	남 성	여 성
성별(남성=1)	0.258(0.039)***		
연령	0.398(0.146)***	-0.187(0.225)	0.543(0.255)**
연령제곱	-0.008(0.003)***	0.002(0.004)	-0.010(0.005)**
근로시간	-0.011(0.002)***	-0.011(0.002)***	-0.011(0.003)***
월평균 임금로그	0.341(0.044)***	0.379(0.060)***	0.305(0.065)***
종사상 지위(정규직=1)	0.098(0.042)**	0.083(0.059)	0.119(0.058)**
일자리 적응(어려움=1)	-0.754(0.042)***	-0.828(0.061)***	-0.681(0.058)***
학자금 대출(있음=1)	-0.184(0.037)***	-0.233(0.050)***	-0.131(0.054)**
주택(자가 및 가족=1)	0.115(0.033)***	0.062(0.045)**	0.186(0.049)***
결혼의향(있음=1)	0.542(0.034)***	0.616(0.047)***	0.461(0.049)***
상수 1	1.922(1.920)	-6.200(3.044)**	3.892(3.219)
상수 2	3.096(1.919)	-5.165(3.042)*	5.195(3.217)
상수 3	4.344(1.918)**	-3.991(3.042)	6.502(3.216)**
상수 4	5.596(1.918)***	-2.664(3.041)	7.693(3.217)**
상수 5	6.939(1.919)***	-1.288(3.041)	9.006(3.217)***
상수 6	8.466(1.919)***	0.197(3.041)	10.599(3.218)***
N	12,043	6,531	5,512
-2 Log Likelihood	37596.612***	19972.494***	17577.41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제4절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결혼 이전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일자리 수준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 갓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성별 격차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일자리의 질은 이미 시작 시점부터 격차가 나, 삶의 만족도나 향후 가족형성 의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어떤 삶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시 겪는 차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청년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층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수립이 진행되어 왔지만, 청년층 내 젠더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청년층의 젠더 격차를 명확히 파악할 만한 기존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충분한 변인을 갖춘 기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청년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변인에 성별을 추가하여 분석해야만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도 좀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특정 취약집단으로 보고 타깃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모든 정책에 성별 특성 및 성별 효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성별고용영향평가로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정책대상을 정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정책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계자료나 정책성과자료가 성별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차별 문제를 정책으로 드러낸 것은 2018년 7월에 일자리위원회

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이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이 대책은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용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채용 성차별 의심 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 성평등 채용 인식 개선 등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7. 5). 채용의 성차별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이 대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채용절차는 기업 고유의 인사관리권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게 성평등한 채용을 권고하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들을 통해 채용에서 성차별이 해소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미혼, 비혼 청년여성들의 정책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상황과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기존 여성정책에 대해 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미혼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에서도 “지금의 정책이 다 기혼에 맞춰진 것 같다”, “출산, 육아 문제로만 여성 문제를 보고 있다” 등의 소외감을 토로한 바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367). 따라서 미혼여성들을 결혼시켜야 하고,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이들의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는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성과 포용성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세대갈등이나 젠더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젠더 갈등은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역차별로 인지하게 된다. 결국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젠더 갈등과 성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별 다양성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조직과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강민정 외, 2019, 발간예정).

## 제 4 장

### 청년층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비교를 중심으로<sup>8)</sup>

#### 제1절 문제제기

최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침체기를 경험한 경기적 요인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인한 노동 절약적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야기한 고용계수의 저하 등이 최근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도 높은 청년 실업률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와 더불어 미스매치라는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학력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발생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이어지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대졸자의 숫자에 부합하는 일자의 수가 창출되지 못함으로써 대졸 학력의 노동시장이 과잉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졸 학력의 노동시장은 과소공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졸 노동시장의 과잉공급, 고졸 노동시장의 과소공급이 야기하는 학력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

8) 이 장의 내용 상당부분은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영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비교를 중심으로」,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2019. 10. 24)에 발표하였음을 밝힌다.

화 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실시된 기간이 아직은 길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및 주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의 정책 진행상황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장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4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지역이동경로 및 취업이동 결정요인 등을 동일한 시점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졸자에 비해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 공간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지역 이동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청년층 취업자의 지역이동경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지역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이직성과를 설명하는 제이론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는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과 직업탐색이론(job searching theory) 등에 기반한 관점인 반면, 후자는 노동시장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과 관련된 관점을 의미한다.

직업탐색모형은 구직자가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 information)이나 지역적 불일치(locational mismatch)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Motensen, 1986; Pissarides, 2000). 즉,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는 본인에게 제안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조건부 기대임금에 기초하여 취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는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일하게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애수입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업탐색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다(김용성, 2008; 김동규·어수봉, 2010).

이와 관련, Sicherman(1991)과 Rubb(2003)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하향 취업한 근로자는 잦은 이동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졸 청년층(23~29세)의 경우 경력변동 자체는 이직성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규·어수봉, 2010). 이러한 결과는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업 능력이 높은 대졸 청년에게는 경력변동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준의 일자리를 탐색하는 합리적인 선택과정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인적자본론에서도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인적자본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다양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설명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과는 달리, 노동력이 동질적이지 않고, 인적자본 투자의 질에 따라서 생산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Becker(1964)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에서 나타나는 질적 차이는 학력 및 기능수준 등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는 개인의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개인이 투자한 인적자본의 축적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나 비정규직 배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더욱 강조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인적자본론과 직업탐색이론에 기반하면,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좋지 못하여 소위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일자리에라도 우선 취업한 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음으로써, 이후 좋은 일자리, 즉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본론과 직업탐색이론 등의 이론들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 및 노력 등에 집중하여 이직성과를 논의하는 반면, 이중노동시장론, 통제적 차별이론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이동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의 보장으로 특징지어지는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저임금으로 정의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Doeringer and Piore, 1971). 여기서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데, 자본집중도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근로조건을 누리게 된다. 더불어 기업은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에서 고용안정과 승진 등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결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노동력의 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에서는 숙련축적의 정도가 느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으로 경력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1차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는 일정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경기 불황시 해고되더라도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재고용될 확률이 높다(윤진호, 1989).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초기 노동시장의 경험이 이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병희, 2002; 전용석·김준영, 2003; 이시균, 2010). 일반적으로, 첫 직장이 대기업이거나, 정규직 또는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이직성고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이직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과 유사한 정규직이 보편적인 2차 노동시장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찬영·조준모, 2006).

앞서 살펴본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금부터 살펴볼 노동시장분절론은 1차 노동시장 내에서도 직업들 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1차 노동시장도 상층 부문과 하층 부문의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차 노동시장의 상층부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주로 습득되는 ‘일반적 특성들(*general traits*)’이 중요한 전문·관리직으로 구성된다. 반면, 1차 노동시장의 하층부는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습득되는 ‘특수한 특성들(*specific traits*)’이 중요한 하위 사무직으로 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부문 노동시장은 하층계급 부문 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인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다(심윤중 외, 2005).

다음으로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시장에서 개인 간의 차별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데, 이 이론은 직업탐색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이직 가능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Phelps, 1972; Arrow, 1973).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성별, 학점, 편입여부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특성들이 채용이나 임금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통계적 차별이론은 고정관념(*stereotype*) 모형과 정보의 정확성(*precision of information*) 모형으로 구분된다. 고정관념모형에 의하면,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믿음에서 기인하여, 기업들이 여성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것에 부정적이게 되고, 결국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성의 인적자원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사전적 믿음을 강화, 통계적 차별이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Coate and Loury, 1993).

정보의 정확성 모형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지하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로자 자신의 실제 생산성 사이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 이

와 관련 Lundberg(1991)는 성별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성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면 여성은 통계적 성차별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금재호, 2004).

본 장의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배경, 학교 및 경력개발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여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 청년층의 첫 직장 선택에 있어서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년층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청년층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노동이동의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보다 청년층의 노동이동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Topel and Ward, 1992; Connolly et al., 1992; Gadecki and Neumark, 1998; Neal, 1999).

Topel and Ward(1992)는 사업체-근로자의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을 통해 임금상승과 함께 경력일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노동이동의 패턴은 미국과 프랑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나,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영국의 경우 청년기의 빈번한 노동이동이 하향적 직업이동으로 나타나며, 스웨덴에서는 더 적은 임금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Ryan, 2001).

Gadecki and Neumark(1998)는 미국의 NLSY 자료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ight and Mcgarry(1998) 역시 NLSY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청년 시절에 노동이동이 적었던 취업자에 비해, 노동이동을 자주 경험한 취업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잦은 노동이동은 저임금을 동반하는 이동경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NES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고정효과를 통제하면서 많은 직장이동이 임금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존재한다(Connolly et al., 1992).

한국에서 청년층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채창균 외(2004)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횟수, 실업기간, 근속기간, 기업규모·직종·업종간 이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규모간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직종간 이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동일직종 내에서의 이동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이동도 매우 활발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용석·김준영(2003)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 직장의 고용형태가 이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비정규직 경험이 다음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별 이동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직장이동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병희(2001)는 청년 실업자의 경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경력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노동이동이 경력을 일치시키도록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병희(2002)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과정에서의 이행경험이 다음에 취업하는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희(2003)는 이 연구에서도 청년층의 노동이동이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박성준(2004)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이공계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높지 않으며, 노동이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지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노동이동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이동에 있어서 직장과 직장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역이동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3. 고졸 취업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졸 학력의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심화됨으로 인해,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학력 또는 스펙보다 능력이 중요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특성화고 입학-졸업-노동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교육-일자리 경로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등장하였다. 특히, 과거 정부는 특성화고 진학자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마이스터고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채용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등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됨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핵심이 결국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취업에 관한 사안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례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는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의 취업지원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한 연구를 추천할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이와 같은 형태의 사례 연구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에 통계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제공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2011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OMS) 자료로 인해,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표본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조사를 실시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 및 특목고 졸업생은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고졸자 취업진

로조사」의 대상자는 사실상 특성화고 졸업생이라 해도 무방하다. 물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있지만(장현진·이지혜, 2012),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실증분석의 대부분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강순희(2013), 남미자 외(2013), 윤윤규 외(2013) 등을 들 수 있다. 강순희(2013)는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실태 및 취업결정요인, 노동시장 정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졸 학력의 취업자는 대졸 학력의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업무와 교육수준 간 미스매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정보도 비체계적으로 취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남미자 외(2013) 역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이후 직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도 높아졌음을 보였다.

윤윤규 외(2013)는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앞선 두 연구와는 다소 차별된다.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반적인 규모와 전공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유출입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졸업생의 지역유출을 결정하는 요인과 취업결정요인, 그리고 임금결정요인 등을 회귀분석하였다. 그들의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중 전공에 흥미와 적성을 느끼고 있는 학생의 비중이 18.0%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업과정 및 노동시장 진입과정,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 후 만족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고교 성적이 중위권 수준

인 졸업생은 부산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 졸업생은 부산지역 외부로 유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계열의 취업률이 상업계열 또는 종합·실업·기타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고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률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즉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유사성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 청년들과 일반계고 졸업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경로에 있어서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국의 전문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지역 이동경로와 취업결정요인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절 청년층 취업자의 지역이동경로 특성

####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 가. 특성화고 현황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수는 498개이다. 지역별로 특성화고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 75개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다음이 서울로 71개 학교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합하면 총 146개 학교, 즉 전국 특성화고 학교 수의 약 30% 정도에 달하는 학교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경북 지역에 51개, 전남 지역에 45개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각각 36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총 30.2만 명 수준이며,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역시 학교 수와 마찬가지로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약 10.8만 명으로 전국 특성화고 학생 수의 30%를 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부산 지역의 학생 수가 약 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서울 지역의 경우에 전국 및 다른 지역과 달리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표 4-1〉 지역별 특성화고 학교 수 및 학생 수(2015년)

(단위: 개, 명)

	학교 수	학생 수		
		남자	여자	소계
전 체	498	168,686	133,335	302,021
서울	71	23,279	25,831	49,110
부산	36	13,894	8,929	22,823
대구	18	10,458	6,436	16,894
인천	27	11,021	10,506	21,527
광주	11	5,534	4,433	9,967
대전	10	5,182	4,181	9,363
울산	8	4,304	3,402	7,706
세종	1	375	82	457
경기	75	32,067	26,447	58,514
강원	24	6,246	3,239	9,485
충북	24	8,349	6,739	15,088
충남	26	7,508	5,253	12,761
전북	29	7,777	5,625	13,402
전남	45	10,065	7,426	17,491
경북	51	10,612	6,339	16,951
경남	36	9,918	6,556	16,474
제주	6	2,097	1,911	4,0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이트(원출처); 류장수·조장식(2016: 203~204)에서 재인용.

현재 한국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는 크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취업반 학생으로 구분되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시점에서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46.6%, 진학률은 36.6% 수준이었다. 이 중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47.6%,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90.4%, 그리고 일반고 취업반 졸업자의 취업률은 22.9%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 나.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역이동

졸업한 전문계 고교 소재지별로 첫 직장 소재지를 추적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졸업자 중 92.1%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수

〈표 4-2〉 전문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전체
수도권	398 (92.1)	23 (5.3)	3 (0.7)	2 (0.5)	3 (0.7)	3 (0.7)	432 (100)
충청권	35 (23.7)	110 (74.3)	1 (0.7)	2 (1.4)	- (-)	- (-)	148 (100)
호남권	63 (29)	20 (9.2)	128 (59)	3 (1.4)	2 (0.9)	1 (0.5)	217 (100)
대구 경북권	31 (15.2)	10 (4.9)	1 (0.5)	150 (73.5)	11 (5.4)	1 (0.5)	204 (100)
동남권	8 (4.2)	5 (2.7)	- (-)	19 (10.1)	156 (82.5)	1 (0.5)	189 (100)
강원권	16 (39.0)	- (-)	- (-)	- (-)	1 (2.4)	24 (58.5)	41 (100)
전 체	551 (44.8)	168 (13.7)	133 (10.8)	176 (14.3)	173 (14.1)	30 (2.4)	1,231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 ) 안의 값은 지역 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 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도권 이외 지역의 직장으로 이동한 비중은 7.9% 수준으로, 수도권 졸업자의 인력유출 규모는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졸업자의 해당 지역 잔류 비중이 82.5%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의 잔류 비중이 58.5%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지역 전문계 졸업자도 약 59.0% 정도만 해당 지역 내에서 첫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난바, 호남권 및 강원권 지역의 경우에는 인력유출의 규모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 가. 일반계고 졸업자의 취업이동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지역과 취업지역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졸업자 중 무려 93.9%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직장으로 이동한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전문계 고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인력유출 규모는 아주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졸업자의 해당 지역 잔류 비중이 75.2%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의 잔류 비중이 48.6%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강원 지역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다른 권역에서 첫 직장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수도권에 직장을 구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잔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잔류 비중이 전문계고 졸업자의 잔류 비중보다 적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에 따른 진학이동이 이미 발생한 효과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권역 잔류 또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비중은 1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전체
수도권	412 (93.9)	12 (2.7)	2 (0.5)	1 (0.2)	3 (0.7)	9 (2.1)	439 (100)
충청권	28 (25.7)	75 (68.8)	- (-)	1 (0.9)	1 (0.9)	4 (3.7)	109 (100)
호남권	38 (32.8)	4 (3.5)	67 (57.8)	1 (0.9)	5 (4.3)	1 (0.9)	116 (100)
대구 경북권	20 (16.1)	3 (2.4)	1 (0.8)	91 (73.4)	9 (7.3)	- (-)	124 (100)
동남권	29 (18.0)	4 (2.5)	- (-)	5 (3.1)	121 (75.2)	2 (1.2)	161 (100)
강원권	15 (42.9)	2 (5.7)	- (-)	1 (2.9)	- (-)	17 (48.6)	35 (100)
전체	542 (55.1)	100 (10.2)	70 (7.1)	100 (10.2)	139 (14.1)	33 (3.4)	984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 ) 안의 값은 지역 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 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 나.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이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는 직장이동에 앞서 대학 진학에 따른 진학이동이 먼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지역에서 직장 소재지역으로 이동경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학 소재지로 경유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4>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이동 비중을 보여주고 있

다. 강원권 고교 졸업생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권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75%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의 경우에는 권역내 대학 진학 비중이 80%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계 고교 졸업생 중 해당 권역에 잔류 또는 수도권으로 진학이동하는 비중은 약 85~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 이동경로

(단위: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전체
수도권	297 (81.6)	50 (13.7)	9 (2.5)	2 (0.6)	1 (0.3)	5 (1.4)	364 (100)
충청권	14 (14.6)	73 (76.0)	4 (4.2)	4 (4.2)	- (-)	1 (1)	96 (100)
호남권	10 (11.0)	6 (6.6)	70 (76.9)	3 (3.3)	2 (2.2)	- (-)	91 (100)
대구 경북권	8 (7.0)	4 (3.5)	1 (0.9)	92 (80.0)	9 (7.8)	1 (0.9)	115 (100)
동남권	11 (8.0)	6 (4.4)	3 (2.2)	13 (9.4)	105 (76.1)	- (-)	138 (100)
강원권	16 (50.0)	3 (9.4)	- (-)	2 (6.3)	- (-)	11 (34.4)	32 (100)
전 체	356 (42.6)	142 (17.0)	87 (10.4)	116 (13.9)	117 (14.0)	18 (2.2)	836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 ) 안의 값은 지역 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 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표 4-5〉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별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전체
수도권	335 (94.1)	6 (1.7)	2 (0.6)	3 (0.8)	2 (0.6)	8 (2.3)	356 (100)
충청권	55 (38.7)	75 (52.8)	3 (2.1)	2 (1.4)	3 (2.1)	4 (2.8)	142 (100)
호남권	23 (26.4)	3 (3.5)	54 (62.1)	- (-)	6 (6.9)	1 (1.2)	87 (100)
대구 경북권	22 (19.1)	4 (3.5)	1 (0.9)	79 (68.7)	9 (7.8)	- (-)	115 (100)
동남권	6 (5.1)	1 (0.9)	- (-)	5 (4.3)	103 (88.0)	2 (1.7)	117 (100)
강원권	3 (16.7)	- (-)	- (-)	1 (5.6)	- (-)	14 (77.8)	18 (100)
전체	444 (53.2)	89 (10.7)	60 (7.2)	90 (10.8)	123 (14.7)	29 (3.5)	835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 ) 안의 값은 지역 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 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지역과 첫 직장 소재지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충청권(대전·충북·충남)과 대구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비중이 고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일치 비중보다 높으며, 전문계고 졸업생의 지역이동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진학이동이 취업이동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지역이동은 진학을 통해 발생하고 대학 진학(특히, 수도권으로의 진학) 이후 취업이동을 통해서 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

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 보다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지역이동 이전에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은 대부분 진학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4절 청년층 첫 직장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각각 첫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지역이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기준 취업지역이동 및 권역별 지역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첫 직장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결정요인의 패턴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가정하여 최소자승(OLS)추정법을 활용한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표 4-6>은 이러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취업지역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결정요인의 메커니즘은 전문계고 졸업생이나 일반계고 졸업생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영향의 크기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을 통한 지역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성별로 취업이동의 확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여부는 취업이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은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대비하여 다른 지역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취업이동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취업이동의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때, 지역이동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6개 권역별로 취업이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기준으로 취업이동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직장 규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1,000인 이상 규모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확률을 높이는 데 임금수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용직 여부 변수와 직장 규모 변수들은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여부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 중요한 요소인 반면, 일반계 고교 졸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비수도권 일반계 고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더 이상 취업이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일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정보를 함께 포함한 회귀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6〉 첫 직장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선형확률모형)

		모형 1: 시도별 취업이동		모형 2: 권역별 취업이동		모형 3: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여성		0.082**	0.02	0.059*	-0.042	0.133***	0.005
상용직여부		0.085**	0.089**	0.060**	0.064**	0.074**	0.062
로그 임금		0.072**	0.008	0.065**	0.031	0.127***	0.089**
고교 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97**	0.218***	0.096**	0.269***	(기준)	(기준)
	호남권	0.197***	0.226***	0.234***	0.360***	0.096*	0.061
	대구 경북권	0.083*	0.113**	0.120***	0.223***	-0.048	-0.067
	동남권	-0.003	0.083*	0.053*	0.174***	-0.132***	-0.085
	강원권	0.241***	0.280***	0.377***	0.506***	0.284***	0.238**
직장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49인	-0.009	0.086*	0.011	0.023	0.076*	0.002
	50~299인	0.065	0.130**	0.019	-0.008	0.101**	-0.04
	300~999인	0.119**	0.161**	0.087*	0.089	0.161**	0.05
	1,000인 이상	0.221***	0.181***	0.193***	0.108***	0.117**	0.220***
산업 통제		○	○	○	○	○	○
직업 통제		○	○	○	○	○	○
취업년도 통제		○	○	○	○	○	○
상수항		-0.462**	-0.634***	-0.348*	-0.563***	-0.455**	-0.660**
결정계수		0.196	0.137	0.248	0.206	0.251	0.178
표본수		1,029	773	1,029	773	615	414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권역 외 지역으로의 취업을 취업이동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표 4-7〉에는 시도 기준 취업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 성별로 취업지역이동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용직 여부 변수는 여성에 대해서만 취업지역 이동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권역이 좁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확보되

어야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수준의 지역이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이동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여성 졸업자의 경우에 특색 있는 추정결과가 나타났는데, 대구경북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의 졸업생보다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역을 이동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첫 직장을 구하면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호남권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학교 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수도권 졸업생들에 비해 높은 확률로 취업이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학교 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1,0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취업지역 이동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시도별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 : 성별 비교(선형확률모형)

종속변수: 시도별 취업이동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용직여부		0.053	0.122**	0.053	0.101*
로그 임금		0.019	0.141***	0.031	-0.021
고교 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12	0.178***	0.161**	0.305***
	호남권	0.224***	0.213***	0.292***	0.208***
	대구 경북권	0.057	0.141**	0.205***	-0.223***
	동남권	-0.017	0.049	0.094	0.103
	강원권	0.215**	0.534***	0.137	0.304**
직장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49인	0.048	-0.04	0.124*	0.078
	50~299인	0.044	0.053	0.245***	0.018
	300~999인	0.118	0.057	0.322***	-0.018
	1,000인 이상	0.153**	0.145**	0.181***	0.145*
산업 통제		O	O	O	O
직업 통제		O	O	O	O
취업년도 통제		O	O	O	O
상수항		-0.487**	-0.477*	-0.533**	-0.512
결정계수		0.186	0.254	0.227	0.137
표본수		502	527	380	393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표 4-8>은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결정요인 추정결과를 학교 유형 및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앞선 시도 기준 지역이동 결정요인 추정결과와는 달리, 상용직으로 취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여성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 여성 졸업생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을 때 수도권으로 지역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충청권 지역의 졸업자에 비해 수도권으로 지역이동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동남권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도 충청권 지역 졸업생들에 비해 수도권으로의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역노동시장 권역이 좁게 형성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표 4-8>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 : 성별 비교(선형확률모형)

종속변수: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용직여부		0.083*	0.045	0.026	0.081
로그 임금		0.055	0.219***	0.058	0.1
고교 지역 (기준: 충청권)	호남권	0.131*	0.093	0.06	0.053
	대구 경북권	0.02	-0.102	-0.008	-0.233**
	동남권	-0.069	-0.180***	-0.122	-0.01
	강원권	0.278***	0.573***	0.117	0.16
직장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49인	0.107*	0.036	0.033	-0.028
	50~299인	0.088	0.051	-0.019	-0.095
	300~999인	0.144	0.138	0.131	0.003
	1,000인 이상	0.042	0.069	0.200**	0.235**
산업 통제		0	0	0	0
직업 통제		0	0	0	0
취업년도 통제		0	0	0	0
상수항		-0.556**	-0.559*	-0.231	-0.814*
결정계수		0.237	0.333	0.208	0.305
표본수		296	319	222	192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권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것을 취업이동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강원 및 충청권 졸업생보다 거리가 먼 대구경북 및 동남권 졸업생의 지역 이동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하는 직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반계 졸업생들의 경우에만 성별에 상관없이 1,000인 이상 기업으로의 취업이 수도권으로의 이동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취업하게 되는 직장의 규모가 지역이동확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5절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역이동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동에 관한 분석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보다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지역이동 이전에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은 대부분 진학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의 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다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 담보되어야 지역을 이동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바,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지역 입장에서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과는 달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취업지역 선택은 대학 졸업 이후로 미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이동 역시 진학이동과 취업이동의 2단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단계별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및 대학졸업 이후 취업 단계의 분석이 구분되어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 제 5 장

###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가족형성 : 초혼이행, 결혼 및 출산의향

본 장은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청년의 가족형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다룬다. 첫째,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초혼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은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제1절 선행연구

### 1. 고용과 청년의 초혼 이행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진입 어려움은 결혼 및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의 단기적인 원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더욱 고령화(지속적인 인구대체율 이하의 TFR+ baby boomer cohort의 은퇴연령 진입+기대수명 연장 등)시켜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 및 출산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증가로 노동시장 진입이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청년층 가족형성 이행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한 취업여부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고용 형태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휘정·김민석(2018)은 6차년도(2013년)~9차년도(2016) 재정패널을 활용하여 만 19~39세 미혼 청년들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로짓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정규직인 경우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를 제외한 개인의 경제활동 변수들은 초혼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남성은 자가 보유와 높은 지출수준을 가진 것이 초혼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가열·천영민(2011)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패널자료의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규모,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 경제활동 관련 요인이 대졸자의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졸자가 속한 사업체의 규모가 대규모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초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았다.

안태현(2010)은 2000년과 2008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청년 남성층의 고용상태 변화가 혼인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형확률 모형 추정 결과는 미취업, 파트타임, 임시/일용의 경우 미혼 확률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기혼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기간 동안 감소한 20~30대의 혼인 감소에 대한 Blinder-Oaxaca 분해방법의 결과는 고용상태 변화가 미혼율 증가의 14~16%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률의 증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고,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자 증가도 미혼율 증가(2~3%)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일용직과 임시직의 감소는 기혼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의 크기는 파트타임과 자영업 감소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자영(2012)은 2008년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미혼 남녀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경력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미취업 여성에 비해 현재 취업한 여성의 결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의 결혼 확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이력이 남성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과 달리, 취업한 경우가 그리고 정규직일수록 초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희정·김민석(2017)은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부터 11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이 만 25~39세의 청년층 결혼이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남성 정규직의 경우 비경제활동에 비해 결혼 가능성은 4.5배가량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만을 분석하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400만 원 이상일 경우 결혼 이행 가능성이 3.5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결혼이행 가능성이 3.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들은 비록 경제활동 요인이 초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로의 진입이 청년의 결혼이행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다소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가족형성에 있어 정규직 일자리로의 진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안정적이며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다. ‘안정화의 불안정화’(Castel, 1995)로 인해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라도 고용지속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형태일지라도 상대적으로 고용지속성이 높을 수 있고, 일자리 질 또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불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청년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유럽과 미국의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Lim(2017)은 미국의 청년패널 1979~2008(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79)을 활용하

여, ‘나쁜 일자리’가 미혼 여성과 남성의 초혼 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나쁜 일자리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는 임금이 낮고, 건강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이산 시간 해저드 모형의 결과는 나쁜 일자리는 남성의 초혼을 지연시키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의 질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초혼 이행에 대한 교육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olsch(2003)는 스페인 유럽 공동체 가구 패널(Spanish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nel)의 1994~97년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직업 불안정성이 16~38세 사이 청년의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불안정성의 척도로 사용된 직업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의 초혼이행에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객관적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 고용의 안정성 및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청년층의 가족형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의 연구는 객관적인 일자리 형태의 바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관적 불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고용과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의향

결혼 및 출산 행위는 개인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이다. 만혼 및 비혼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출산을 하락은 지속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지연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개인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누가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떠한 개인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 행동을 결정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개인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은 미비하였다.

권소영 외(2017)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2016년 만 25~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규직이라는 고용지위는 청년여성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석(2006)이 취업이 미혼여성에게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에게는 결혼의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영선(2015)의 연구에서 안정된 고용 지위를 갖고 있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 고용 지위를 가진 남성에게서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혼의향에 관한 긍정적 영향이 여성에게도 확대되어, 여성의 결혼의향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효미(2017)는 청년층의 결혼관 및 가족관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20~39세 미혼 남녀 1,07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다항로짓 분석의 결과는 연령, 4년제 이상 학력, 2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치관 중 결혼의미에 관한 긍정적, 주체적 태도와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미혼자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로짓분석 결과는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출산의향이 높았으며,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김인순·김영택(2017) 또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미혼남녀(20~44세)를 바탕으로 ‘청년남성’의 출산의향에는 연령이 어릴수록, 이직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도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출산의향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자신감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미혼 남녀들의 경제활동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김인순·김영택(2017)은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 15~34세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는 미혼 청년 1,314사례를 활용하여 취업 여부와 경제적 독립여부가 결혼자신감의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보다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등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신감 또한 미취업에 비해 취업을 한 경우의 출산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리 외(2017)도 동일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미혼의 임금근로 취업 중인 480명



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자신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결혼 및 출산 자신감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여부에 따라, 그리고 높은 직무만족도가 결혼, 출산 및 양육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주관적 요인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미혼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진입 또는 정규직 여부 등의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인 경제활동 지표의 영향만을 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불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미혼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년층의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본 장은 초혼이행과 결혼 및 출산의향 분석 두 가지로 구성된다. 두 가지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데이터의 2007년 시작된 1차년부터 2017년 완결된 11차 자료를 활용한다. 2007년 1차 조사 당시 15~29세였던 표본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한 것이다.

#### 가. 결혼이행

첫 번째 초혼이행 분석을 위해 이산시간 생존분석(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는 미혼에서 기혼이라는 이행 사건(event)이 발생하는 해저드(hazard) 확률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석은 1차 조사에서 18세 이상(최소연령 18세, 최대 29세, 1차년도 2007) 미혼이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패널이 종료되는 11년차(최소 29세, 최대 40세, 1차년도 2017)까지 이들의 혼인상태를 추적하여 초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을 측정한다. 이러한 기간들이 하나의 분석의 단위가 되는 에피소드(episode)가 된다. 관측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사건은 초혼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07년 1차 조사에서 18세 이상 미혼인 청년으로 최대 관측기간 11년 동안 단 1차라도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기에 분석의 주가 되는 표본은 관측기간 동안 취업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 정보가 있는 청년 6,868명으로 남성 3,292명과 여성 3,576명으로 구성된다(표 5-7, 표 5-8 model 1, 3, 4 참조). 하지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결혼이행을 보는 것은 선택효과(select effects) 문제를 야기하기에 불안정 고용의 초혼이행에 관한 분석의 이전 단계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2007년 1차 조사에서 미혼이었던 18세 이상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초혼이행 모델을 사전적 분석으로 포함한다(표 5-7, 표 5-8, model 2 참조). 이 사전적 분석은 청년남성 4,725명과 청년여성 4,463명, 총 9,188명을 대상으로 한다.

초혼이행 분석을 위해 멀티레벨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사용한다. 사건사 분석은 관측기간 동안 모형의 종속변수인 결혼이라는 관심사건(marriage event) 발생 여부와 발생시점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다.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월 또는 년이라는 이산시간(discrete-time)일 경우 연속시간 모델(continuous-time model)보다는 이산시간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Steele, 2005).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장점은 미혼기간에 따른 결혼이행 패턴을 보여주는 기준선 해저드(baseline hazard)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미혼상태에 있는 한 청년이 결혼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관측하는 데 최대 기간이 11년이다. 미혼이라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상태로 이행한 경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측정하지만, 그 외의 상태로 이행하거나 관측이

종료되는 11년차까지 미혼으로 남은 경우, 우측 중도절단(right-censored)으로 처리된다. 패널이 시작된 1년차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아 특정 A년차에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관측이 중단되어 절단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A+1년에 다시 미혼상태로 조사에 들어오게 된 경우, 다시 미혼에서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건 발생 가능성의 측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종속변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중단 되어 절단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서베이에 재진입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 한 청년이 만들어내는 에피소드(미혼에서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지 연속적인 시간 동안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것)가 여러 개일 수 있다. <표 5-1>을 보면, 본 장의 분석대상 중 한 청년이 최대로 5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청년(2단계 레벨)에게서 관측되는 에피소드들(1단계 레벨)은 그 청년의 관측되지 않은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개인에게서 반복되는 에피소드들 간의 관측되지 않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레벨 모형 중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사용한다.

개인 j에 속한 에피소드들 e가 시간 관측단위인 t interval에서 사건이 발생할 이산시간 해저드를 나타내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t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전제하에, t에서 미혼인 개인 j의 에피소드 e에서 결혼 사

<표 5-1> 청년 개인별 에피소드 분포 : 이행분석 사용 개인-기간(person-period)

N. of episodes	
1	5,311
2	2,030
3	238
4	19
5	1
전체 에피소드(episode) 수	7,599
개인	6,86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건(event)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개인-기간 형태(person-period)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을 때, 결혼사건(event)인  $y_{jet}$ 가 t시점에서 개인 j에 속한 에피소드 e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이 된다.

$$h_{jet} = \Pr(y_{jet} = 1 | y_{jes} = 0, s < t) \quad (1)$$

$$\log\left(\frac{h_{jet}}{1-h_{jet}}\right) = \alpha_1 D_1 + \alpha_2 D_2 + \dots + \alpha_g D_g + \beta' x_{jet} + u_j \quad (2)$$

이산시간 해저드  $h_{jet}$ 를 종속변수가 결혼 발생여부라는 이항변수인 로짓 모델에 적용하면 식 (2)와 같다. 연결함수(link function)로 로짓 링크(logit link)를 사용한다. 방정식 우측의 앞부분은 단계 함수형(step function)을 활용하여 기준선 해저드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시간 t를 g라는 범주로 그룹화하고 각각의 그룹을 더미변수(D)로 정의한 것이다. 시간 t에 대한 기준선 해저드는  $\alpha(t) = \alpha_1 D_1 + \alpha_2 D_2 + \dots + \alpha_g D_g$ 로 나타낸다. 계수  $\alpha$ 는 복합 상수항 역할을 하여, 미혼 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준선 해저드의 형태를 보여준다. 시변 또는 시불변 변수의 계수  $\beta$ 는 시간 t에서 결혼이 발생할 로그오즈에 변수 X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u_j$ 는 개인 j에 대한 확률효과를 나타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sigma_u^2$ 인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관측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미혼으로 계속 남게 되는 에피소드들은 절단(censored)으로 처리한다. VIF<10을 통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결혼 및 출산의향

두 번째 결혼 및 출산의향 분석의 종속변수는 결혼의향이 있는지, 출산의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종속변수가 이항이다. 분석을 위해 2단계 확률절편 로짓 모형(Two-level random intercept logit model)을 사용한다. 청년패널에서 결혼 및 출산의향에 대한 조사는 10차 웨이브인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2회 조사되었다. 결혼의향 분석에 사용된 표본

은 2년간의 조사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의향 조사에 응답하였고, 조사 당시 미혼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남성 1,829명, 여성 1,794명으로 총 3,623명을 대상으로 한다. 출산의향 또한 2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출산의향에 응답을 한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 또는 기혼 남성 1,493명, 여성 1,280명 총 2,7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에서 응답자 R의 의향은 2년간(2016~17년) 최소 1번 또는 최대 2번 관측된다. 이는 의향(관측된 occasions)이 각 개인(individual)에게 속하게(nested) 되는 2단계(hierarchical) 구조이다. 한 청년이 만들어낸 2개의 의향들은 그 청년의 관측되지 않은 개인 특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에 확률절편(random intercept)모형을 사용한다.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에 대한 모형은 동일하며, 각각 분석한다.

식 (3)의 좌측  $y_{jit}$ 는 시간 t에서 상위레벨 개인 j에 속한(nested) 하위레벨인 관측된 의향(결혼/출산) i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y_{jit} = 1$ 로, 그렇지 않다면  $y_{jit} = 0$ 이다. 개인 j에 속한 i가 t에서 의향을 가질 확률은  $\pi_{jit} = \Pr(y_{jit} = 1)$ 로 나타낸다.

$$y_{jit} = \pi_{jit} + \epsilon_{jit} \quad (3)$$

이를 바탕으로 2단계 확률절편 모형을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log(\pi_{jit}/(1 - \pi_{jit})) = \beta_0 + \beta_1 x_{1jit} + \dots + \beta_{10} x_{10jit} + \beta_{11} x_{jt} + \dots + \beta_{15} x_{15jt} + u_j \quad (4)$$

여기서  $X_{jit} (x_{1jit} + \dots x_{10jit})$ 는 모든 설명변수들을 포함하는 벡터이며,  $\beta_0$ 는 절편(intercept),  $\beta_1 - \beta_{10}$ 은 1레벨인 의향수준에서 측정되는 변수들의 계수,  $\beta_{11} - \beta_{15}$ 는 2레벨인 개인수준의 변수들의 계수,  $u_j \sim N(0, \sigma^2_u)$ 는 2레벨의 개인 j에 대한 확률절편으로 이는 각 개인들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u_j$ 는 개인 간 그리고  $X_{jit}$  간에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 2. 변수 측정

### 가. 결혼이행

결혼이행의 종속변수는 결혼 여부에 대한 이행변수로 미혼인 상태의 관측이 시작된 만 18세 이후부터 매년 관측되는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결혼을 하였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다.

주요 설명변수는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및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후 축적된 직업력이다. 경제활동상태는 학생,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구분한다.

주관적 고용 안정성은 다음의 문항을 사용하여 1. 보통 이하(1~3 응답), 2. 중요(4 응답), 3. 매우 중요(5 응답)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현 직업 선택 시 다음의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의 질은 현 직장에 대한 아래의 12가지 만족도 항목(각 5점 척도)을 바탕으로 각 관측년도별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항목에 대한 평균이 전체의 평균 이상이면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균 이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측정한다. 직장만족도 12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내용, 2)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 3) 자기발전의 추구, 4) 임금과 수입, 5) 고용의 안정성, 6) 일의 자율성과 권한, 7) 직장까지의 거리 가까움, 8) 장래가 유망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장, 9) 사무실의 물리적 근로환경, 10) 직장동료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1) 인사고과의 공정성(임금근로만), 12) 복리후생(임금근로만).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의 일자리 수와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를 연속변수로, 그리고 현재 일하는 회사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100인 이상인지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로그로 사용한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그리고 학력을 포함한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지를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가족의 경제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아버지의 4년제 대학 졸업여부도 포함한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시기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대, 2010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로 구분하였다(표 5-2 참조).

〈표 5-2〉 결혼이행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종속변수		관측기간(interval time) 동안 주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1, 하지 않으면 0
주요 설명 변수	직업 관련 요인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고용안정성 일자리 질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평균근로소득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하, 4년제졸 이하, 석사 이상)
그 외 통제 변수		주거형태(독립 vs. 가족) 아버지 4년제 졸업여부 수도권 거주여부 period(2000년대, 2010년대 상반기, 2010년대 하반기)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표 5-3〉은 결혼이행에 사용된 미혼청년 6,868명의 개인-기간 단위 관측치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표 5-3〉 결혼이행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성별	남자	46.7%	일자리 질(평균 이상)	52.7%
	여자	53.26%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2.33
연령		27.5세(18~39)	총 일자리 수	2.0
학력			회사 규모 100인 이상	29.40
고졸 미만		0.29%	임금(월평균, 만 원)	201.8
고졸		22.9	부모 동거여부	76.6
전문대졸		28.9	아버지 4년제 졸업여부	21.4
4년제 대졸		45.1	수도권 거주여부	51.8
석사학위 이상		2.7	기간	
4년제 대졸여부		47.8	2000년대	20.4
종사상 지위			2010년대 초반	46.7
상용직		80.5	2010년대 후반	32.8
임시직		13.5		
일용직		1.3		
고용원 있는 자영업		1.0		
고용원 없는 자영업		3.7		
일자리 안정성				
보통 이하		29.4		
중요		49.3		
매우 중요		21.2		
전체 관측된 개인-기간 수				28,277
전체 개인 수				6,868

주: 여부인 경우 더미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통계량의 수치는 1로 코딩된 경우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 나. 결혼 및 출산의향

두 번째 분석의 종속변수인 결혼 및 출산의향은 다음의 문항을 사용하여 이항변수로 측정한다. 결혼의향의 경우 “\_님께서는 결혼할 의향이 있



으십니까? 예/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경우 의향이 있는 것으로 1, 아니면 없는 것으로 0으로 코딩한다. 출산의향의 경우 “\_님께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자녀가 있으신 분은 현재 자녀에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을, 미혼이신 분들은 향후 결혼 후 자녀계획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경우 의향이 있는 것으로 1로, 아니면 의향이 없는 것으로 0으로 코딩한다. 그 외의 주요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는 <표 5-4>와 같다.

<표 5-4> 결혼 및 출산의향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종속변수		관측기간(interval time) 동안 주 결혼(또는 출산) 의향이 있으면 1, 없으면 0
주요 설명 변수	직업 관련 요인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고용안정성 일자리 질 근로시간 52 초과 여부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평균근로소득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 연령 자녀유무(출산의향 분석만) 결혼여부(출산의향 분석만) 학력(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하, 4년제졸 이하, 석사 이상)
그 외 통제 변수		부모 동거여부 아버지 4년제 졸업여부 수도권 거주여부 period(2000년대, 2010년대 상반기, 2010년대 하반기)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결혼의향에 사용된 미혼 3,623명의 개인-기간 관측치의 기술통계는 <표 5-5>와 같다. 출산의향에 사용된 미혼 및 기혼 2,773명의 개인-기간 관측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5-6>에 정리되었다.

〈표 5-5〉 결혼의향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성별	남자	50.3	일자리 질(평균 이상)	55.5
	여자	49.7	근로시간 52 초과여부	11.9
연령		29.1 (22~39세)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3.0
학력			총 일자리 수	2.3
고졸 미만		0.1	회사 규모 100인 이상	30.8
고졸		18.9	임금(월평균, 만 원)	235.7
전문대졸		25.8	부모 동거여부	75.8
4년제 대졸		51.7	아버지 4년제 졸업여부	27.1
석사학위 이상		3.4	수도권 거주여부	52.3
4년제 대졸여부		55.4	기간	
종사상 지위			2016	50.0
상용직		83.0	2017	49.9
임시직		10.3		
일용직		1.2		
고용원 있는 자영업		0.9		
고용원 없는 자영업		4.5		
일자리 안정성				
보통 이하		29.7		
중요		50.8		
매우 중요		19.3		
전체 관측된 개인-기간 수				6,179
전체 개인 수				3,623

주: 여부인 경우 더미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통계량의 수치는 1로 코딩된 경우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표 5-6〉 출산의향 기술통계(개인-기간 단위, person-period)

성별	남자	55.9	일자리 질(평균이상)	61.0
	여자	44.1	근로시간 52 초과 여부	11.7
연령		33.1 (23~39)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4.7
학력			총 일자리 수	2.6
고졸 미만		0.2	회사 규모 100인 이상	32.0
고졸		17.1	임금(월평균, 만 원)	290
전문대졸		25.3	부모 동거여부	26.6
4년제 대졸		51.4	아버지 4년제 졸업여부	20.6
석사학위 이상		5.9	수도권 거주여부	50.3
4년제 대졸여부		57.3	기간	
종사상 지위			2016	49.7
상용직		82.4	2017	50.2
임시직		6.2	자녀 수	
일용직		0.8	0명	48.8
고용원 있는 자영업		2.4	1명	24.1
고용원 없는 자영업		8.1	2명 이상	27.1
일자리 안정성			평균 자녀 수	0.82
보통 이하		27.2	결혼여부(evermarried=1)	70.1
중요		49.3		
매우 중요		23.4		
전체 관측된 개인-기간 수				4,416
전체 개인 수				2,773

주: 여부인 경우 더미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통계량의 수치는 1로 코딩된 경우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 제3절 분석 결과

## 1. 결혼이행

## 가. 남 성

<표 5-7>의 모델 1은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 청년남성의 초혼이행에 대한 기준선 해저드를 보여준다. 미혼상태에서 머문 기간이 8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할 해저드 확률은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다가, 9년차에 결혼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 이후 해저드는 감소한다.

모델 2는 본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경제활동상태가 남성 미혼청년의 초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모델 1, 그리고 3과 4가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학생,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를 다 포함한다. 결과를 보면, 학생에 비해 취업자인 경우 초혼이행의 오즈가 13배 높고, 실업자는 2.5배, 비경제활동상태는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청년 결혼이행에 관한 연구결과(안태현, 2010; 주희정·김민석, 2017)에서 보여준 경제활동상태와 청년남성의 결혼이행의 정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표 5-7〉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OR(남성)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uration				
D1	0.07**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2	0.05** (0.01)	0.00** (0.00)	0.00** (0.00)	0.00** (0.00)
D3	0.05** (0.01)	0.00** (0.00)	0.00** (0.00)	0.00** (0.00)

〈표 5-7〉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4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00)
D5	0.0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6	0.09**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7	0.09**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8	0.07**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9	0.12**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10	0.04**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활동상태(학생, r)				
취업자		13.05** (1.86)		
실업자		2.52** (0.74)		
비경제활동		1.72** (0.41)		
연령			1.15** (0.02)	1.15** (0.02)
4년제 대졸 이상			1.48** (0.13)	1.46** (0.13)
종사상 지위(상용직, r)				
임시직			0.68** (0.11)	0.68** (0.11)
일용직			0.23** (0.16)	0.23** (0.16)
고용원 있는 자영업			0.73 (0.22)	0.74 (0.22)
고용원 없는 자영업			1.04 (0.19)	1.05 (0.19)
일자리 안정성				
중요				0.91 (0.08)

〈표 5-7〉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매우 중요				1.02 (0.11)
일자리 질				1.09 (0.09)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1.04 (0.02)	1.04 (0.02)
총 일자리 수			1.02 (0.04)	1.02 (0.04)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13 (0.09)	1.12 (0.09)
월평균 임금(logged)			2.11** (0.26)	2.05** (0.26)
부모 동거(동거, r)			1.34** (0.11)	1.34** (0.11)
아버지 4년제 졸업			0.90 (0.09)	0.90 (0.09)
수도권 거주			1.15* (0.09)	1.16* (0.09)
기간(2000s, R)				
2010년대 초반			0.69** (0.10)	0.70** (0.10)
2010년대 후반			0.22** (0.04)	0.22** (0.04)
Random effect SD	0.00(0.1)	0.00(0.1)	0.43(0.24)	0.44(0.23)
Log likelihood	-3145.5849	-3732.7331	-2907.6205	-2906.0735
총 관측치 (observations)	13,217	29635	13217	13217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모델 3은 기준선 해저드를 표상하는 시간 더미에 추가하여 직업력 및 현재 일자리의 객관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그 외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초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시직이 상용직에 비해 초혼이행의 오즈가 32% 감소하며, 일용직의 경우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용직에 비해 초혼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초혼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규직일수록(박가열 · 천영민, 2011; 주희정 · 김민석, 2018) 임금이 높을수록(주희정 · 김민석, 2017) 남성의 초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것이다.

그 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 이행 가능성은 증가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한 경우 초혼이행 오즈는 1.3배 높아지며, 수도권에 사는 경우 1.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로 올수록 초혼이행 해저드가 낮아져 비혼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델 4는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의 효과를 보는 모형이지만, 이들 주관적인 일자리 특성 요인들은 남성의 초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나. 여성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 청년여성의 초혼이행에 대한 기준선 해저드는 <표 5-8>의 모델 1에 나타난다. 미혼상태에 머문 기간이 9년차가 될 때까지 결혼할 해저드 확률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0년차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가 미혼 청년여성의 결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모델 2의 결과는 학생에 비해 취업자인 경우 초혼이행의 오즈가 13배 높고, 실업자는 4.8배, 비경제활동상태는 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청년여성의 초혼에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청년남성과 비교하여서는 취업자의 영향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는 남성에 비해 초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학생에 비해 9배가 높은 것은 남성의 경우 1.7배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큰 영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모델 3에서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미혼여성의 초혼이행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임시직이 상용직에 비해(다른 조건이 같을 때) 초혼이행의

오즈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직업력이 초혼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초혼이행의 오즈가 증가한다. 또한, 평균임금이 높은 미혼여성의 초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여부와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경제활동 요인이 여성 결혼이행의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윤자영, 2012; 주희정·김민석, 2017).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미혼여성의 초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수도권 거주여부로 확인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초혼이행 오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유사하게,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올수록 초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의 주관적인 일자리 특성 요인인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의 질은 초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모델 4).

〈표 5-8〉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OR(여성)

	Model 1	Model 2	Model 3	Mode 4
Duration				
D1	0.07**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2	0.08** (0.01)	0.00** (0.00)	0.00** (0.00)	0.00** (0.00)
D3	0.0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4	0.0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5	0.0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6	0.07** (0.01)	0.00** (0.00)	0.00** (0.00)	0.00** (0.00)
D7	0.07**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8	0.0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표 5-8〉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 4
D9	0.09** (0.01)	0.01** (0.00)	0.00** (0.00)	0.00** (0.00)
D10	0.04**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활동상태(학생, r)				
취업자		13.83** (1.97)		
실업자		4.82** (1.18)		
비경활		9.26** (1.47)		
연령			1.20** (0.02)	1.20** (0.02)
4년제 대졸 이상			1.11 (0.09)	1.11 (0.09)
종사상 지위(상용직, r)				
임시직			0.78** (0.10)	0.78** (0.10)
일용직			1.13 (0.47)	1.13 (0.48)
고용원 있는 자영업			1.32 (0.43)	1.33 (0.43)
고용원 없는 자영업			0.84 (0.16)	0.84 (0.16)
일자리 안정성				
중요				1.02 (0.09)
매우 중요				1.11 (0.12)
일자리 질				1.00 (0.08)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1.07** (0.02)	1.07** (0.02)
총 일자리 수			1.11** (0.04)	1.11** (0.04)

〈표 5-8〉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 4
회사 규모 100인 이상			0.92 (0.08)	0.92 (0.08)
월평균 임금(logged)			1.47** (0.17)	1.46** (0.17)
부모 동거(동거, r)			1.02 (0.09)	1.02 (0.09)
아버지 4년제 졸업			1.04 (0.10)	1.04 (0.10)
수도권 거주			0.84** (0.06)	0.84** (0.07)
기간(2000s, R)				
2010년대 초반			0.60** (0.09)	0.60** (0.10)
2010년대 후반			0.31** (0.06)	0.31** (0.06)
Random effect SD	0.00(0.01)	0.00(0.01)	0.74(0.15)**	0.79(0.16)**
Log likelihood	-3733.964	-4878.478	-3535.0532	-3534.4769
총 관측치 (observations)	15,060	29,921	15,060	15,060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 2. 결혼 및 출산의향

### 가. 결혼의향

〈표 5-9〉는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에 관한 오즈비(Odds ratio)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은 본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인 직업 관련 변수들과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일 경우 여성의 결혼의향을 가질 오즈는 40% 감소하며, 일용직의 경우는 75%, 남성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일용직일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상용직에 비해 약 58% 결혼의향을 가질 오즈가 감소한다. 주

관적인 고용안정성은 남녀 미혼청년들이 결혼의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자리를 선택 기준으로 고용안정성을 보통이라고 한 경우에 비해, 중요하다고 한 경우 결혼의향을 가질 오즈가 남성은 1.28배, 여성은 1.42배 증가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경우 남성은 1.35배, 여성은 1.7배 증가한다.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남성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외의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직업력은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수준 및 그 외 통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모델 2)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남성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6~8% 정도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도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은 6~12%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제변수들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 또한, 본인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은 남성의 결혼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낮으며,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표 5-9〉 결혼의향 OR(취업자+미혼)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연령	0.99 (0.02)	0.98 (0.02)	0.95** (0.02)	0.95** (0.02)
4년제 대졸 이상		1.48** (0.21)		1.22 (0.18)
종사상 지위(상용직, r)				
임시직	0.77 (0.15)	0.76 (0.15)	0.61** (0.13)	0.61** (0.13)
일용직	0.35** (0.15)	0.34** (0.15)	0.25* (0.18)	0.30* (0.22)
고용원 있는 자영업	0.42* (0.20)	0.42* (0.20)	0.83 (0.93)	0.69 (0.78)
고용원 없는 자영업	1.13 (0.32)	1.24 (0.35)	0.65 (0.22)	0.61 (0.21)

〈표 5-9〉의 계속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일자리 안정성				
중요	1.28* (0.18)	1.22 (0.17)	1.42** (0.21)	1.30* (0.19)
매우 중요	1.35* (0.25)	1.27 (0.23)	1.70** (0.32)	1.64** (0.31)
일자리 질	0.97 (0.12)	0.90 (0.11)	0.91 (0.11)	0.82 (0.10)
주 근로 52시간 초과	1.15 (0.20)	1.15 (0.20)	1.09 (0.27)	1.12 (0.28)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0.96 (0.03)	0.99 (0.03)	0.97 (0.03)	0.97 (0.03)
총 일자리 수	1.00 (0.05)	1.06 (0.06)	0.93 (0.05)	0.95 (0.05)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12 (0.16)	1.09 (0.16)	1.19 (0.17)	1.23 (0.18)
월평균 임금(logged)	1.76** (0.32)	1.81** (0.34)	1.14 (0.23)	1.36 (0.28)
부모 동거(동거, r)		1.20 (0.16)		0.94 (0.15)
아버지 4년제 졸업		0.81 (0.12)		0.66** (0.10)
수도권 거주		0.74** (0.10)		0.62** (0.09)
2017(2016, r)		0.61** (0.06)		0.67** (0.07)
Random effect SD	1.56(0.13)**	1.56(0.13)**	1.72(0.13)**	1.72(0.13)**
Log likelihood	-1816.6376	-1796.2817	-1868.8399	-1848.7334
총 관측치 (observations)	3111	3111	3,068	3068

주: \* p<0.1, \*\* p<0.05,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 나. 출산의향

〈표 5-10〉은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인 취업한 청년들의 출산의향에 관한 오즈비를 나타낸다. 모델 1은 본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인 일자리와 관

련된 변수들과 연령 및 결혼여부를 포함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질의 통계적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변수 중 노동시장 진입 이후 축적된 직업력과 현재 회사의 규모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남성이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여성이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증가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처음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은 경우,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현재 결혼을 했을 경우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0〉 출산의향 OR(취업자와 미혼+기혼)

	전 체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연령	0.71** (0.03)	0.89** (0.03)	0.56** (0.04)	0.83** (0.03)
결혼여부(미혼, r)	0.01** (0.00)	0.63* (0.17)	0.02** (0.01)	0.61* (0.17)
자녀 수(0명, r)				
1명		0.04** (0.01)		0.03** (0.01)
2명 이상		0.00** (0.00)		0.00** (0.00)
4년제 대졸		1.44* (0.27)		1.14 (0.27)
상용직 여부	1.29 (0.39)	1.06 (0.26)	1.48 (0.52)	0.82 (0.25)
일자리 안정성				
중요	0.74 (0.18)	0.84 (0.17)	0.85 (0.26)	0.92 (0.24)
매우 중요	1.01 (0.30)	0.97 (0.22)	0.70 (0.26)	0.72 (0.22)

〈표 5-10〉의 계속

	전 체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일자리 질	1.29 (0.25)	0.98 (0.16)	1.02 (0.24)	0.92 (0.20)
주 근로 52시간 초과	0.72 (0.21)	0.81 (0.19)	1.11 (0.59)	0.78 (0.35)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0.85** (0.03)	0.98 (0.03)	1.09* (0.05)	1.04 (0.04)
총 일자리 수	0.84** (0.07)	1.00 (0.07)	1.11 (0.10)	0.99 (0.08)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49* (0.35)	1.35* (0.24)	1.10 (0.34)	1.08 (0.27)
월평균 임금(logged)	0.62 (0.20)	1.03 (0.27)	1.39 (0.41)	0.90 (0.24)
아버지 4년제 졸업		0.90 (0.18)		1.13 (0.29)
수도권 거주		0.60** (0.10)		0.53** (0.12)
2017(2016, r)		0.44** (0.07)		0.51** (0.10)
Random effect SD	2.56(0.25)**	1.16(0.24)**	2.80(0.34)**	1.50(0.31)**
Log likelihood	-1150.235	-809.85912	-817.88678	-564.01552
총 관측치 (observations)	2,469	2,469	1,947	1,947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자녀 수와 그 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모델 2의 결과는 현재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남녀 모두 감소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 이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0년대 이후 1.2에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만을 대상으로 출산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1>에 제시된다. 주요 설명변수인 직업력과 연령의 효과를 검토한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표 5-11〉 출산의향 OR(취업자와 기혼)

	기혼자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연령	0.62** (0.04)	0.86** (0.03)	0.42** (0.05)	0.76** (0.04)
자녀 수(0명, r)				
1명		0.04** (0.01)		0.02** (0.01)
2명 이상		0.00** (0.00)		0.00** (0.00)
4년제 대졸		1.52* (0.33)		1.63 (0.50)
상용직 여부	1.49 (0.54)	1.16 (0.33)	1.17 (0.55)	0.56 (0.22)
일자리 안정성				
중요	0.70 (0.21)	0.86 (0.19)	0.64 (0.28)	0.79 (0.26)
매우 중요	0.88 (0.30)	0.88 (0.23)	0.69 (0.37)	0.70 (0.28)
일자리 질	1.24 (0.28)	0.92 (0.18)	0.96 (0.30)	0.85 (0.23)
주 근로 52시간 초과	0.54* (0.18)	0.63* (0.17)	0.79 (0.58)	0.41 (0.25)
현재 일자리 경력연수	0.83** (0.04)	0.98 (0.04)	1.09 (0.07)	1.06 (0.05)
총 일자리 수	0.86 (0.09)	1.05 (0.08)	1.20 (0.15)	1.01 (0.10)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68* (0.46)	1.47* (0.30)	1.98 (0.91)	1.46 (0.49)
월평균 임금(logged)	0.63 (0.23)	1.11 (0.33)	1.73 (0.66)	0.86 (0.28)
아버지 4년제 졸업		0.96 (0.23)		0.88 (0.29)
수도권 거주		0.68** (0.13)		0.53** (0.15)
2017(2016, r)		0.40** (0.07)		0.47** (0.11)
Random effect SD	2.79(0.28)**	1.21(0.24)**	3.50(0.48)**	1.66(0.37)**
Log likelihood	-970.20832	-647.24655	-613.94119	-388.35482
총 관측치 (observations)	1779	1,779	1,318	1,318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질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이 남성이 출산의향을 가지는 데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 남성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현재 직장에서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출산의향을 가질 오즈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6% 감소한다. 또한, 회사 규모가 큰 경우 남성의 출산의향의 가능성이 증가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기혼자 모두 출산의향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수와 그 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모델 2의 결과는 자녀가 적을수록, 4년제를 졸업했을 경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2016년에 비해 2017년일 경우에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남녀 모두 증가한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 중 미혼인 경우 현재 자녀가 모두 0명이며, 미혼만을 대상으로 한 출산의향에 대한 모델 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수도권 거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절 소 결

본 장의 목적은 주관적 고용 불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청년의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조사 완결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멀티레벨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으로 초혼이행의 결정요인과 2단계 확률절편모형으로 결혼 및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초혼이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에서 벗어나 취업상태에 있는 것이 남녀 청년 모두의 초혼이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 또한 학생인 경우보다 초혼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객관적 요인들 중 정규직 여부가 청년 남녀 모두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 이후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Grimm and Bonneuil, 2001; Kim, 2015)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적 자본이 높은 경우 생애주기 동안의 고용 지속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생애사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재진입에도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 확인된 노동시장 경력과 청년여성의 결혼이행 가능성의 긍정적 관계는 노동시장 경력이 생애사건 이후 고용유지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에만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청년여성이 생애주기 사건으로 결혼으로 진입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기대와 달리,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은 현재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있는 청년의 결혼이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요인들은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의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기준으로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둔 남녀 청년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과 그 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청년여성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청년남성의 경우 주관적 안정성의 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청년남성보다 여성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현재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미혼 및 기혼 청년들의 출산의향은 그들이 축적한 직업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 근속년수가 길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경력을 통한 인적자본이 앞서 확인된 여성의 결혼의향뿐 아니라, 출산의향의 중요 결정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청년남성들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험했던 일자리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 일하는 회사의 회사 규모가 클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기에 청년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출산을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진입 이후 근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직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출산을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비록 일자리의 질 척도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질 수준이 결혼 및 출산의향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으나, 기혼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기혼남성의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의 한 요소인 근로시간이 기혼 청년남성들의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와 청년이 생애 동안 축적해온 직업력 또는 노동시장 정착도가 결혼이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후자의 영향은 출산의향을 가지는 데도 중요하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청년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지만, 청년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점과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이 길수록 출산의향을 가지게 되는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의 진입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을 한 취업자라는 선결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생애주기 사건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간의 근로시간이 기혼남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출산장려정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와 청년이 생애 동안 축적해온 직업력 및 노동시장 정착도가 결혼이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 지연과 비혼에서 야기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학업이 종료된 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취업 지원을 하는 정책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활동을 통해 팬층은 직업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경력에 맞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남녀 청년 모두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점과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이 긴 여성일수록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혼 여성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안착을 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선결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과 출산으로의 진입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객관적인 종사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은 생애주기가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에 결정적 요인이 되어 왔다는 사회적 경험이 개인의 결혼 및 출산 의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이 생애주기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 고용 모델의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모성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육아 및 돌봄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본 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생애주기 사건을 이행하면서도 고용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보편적 여성 고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인, 가정 그리고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기혼 남성의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혼 및 출산의향은 최근 2년간의 조사에서만 이루어져, 이들의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이 불가능하다. 향후 장기간의 추적이 가능한 패널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청년들의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이행으로 이어졌는지,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로 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지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에 이은 청년 삶의 질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이다. 최근 청년 고용의 양상이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용지표가 반영하는 청년고용의 양상과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취업여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더불어, 일자리의 불안정성에서 파생된 소득 및 지출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생활영역 전반에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를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지표가 나타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여건 외에, 청년층의 실 체감여건을 전반적 생활여건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상당 비중이 여전히 일자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생활 영역별로 세부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함의를 찾는 본 연구 시리즈는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은 청년의 빈곤실태 분석에 따른 삶의 질 개선방안 연구로, 청년층의 소득/소비지출 분배지표 추정을 통해, 이들 지표가 청년층의 생활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이 지속적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2,871

만 원, ‘청년부부’는 3,727만 원,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2,687만 원, ‘청년이 속한 기타 가구’는 3,34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가구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을 세 가지 균등화 기준소득(총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가 11% 내외의 빈곤율을, 청년부부가 1% 내외, 청년부부와 기타 가구원은 7.2~11.4%,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 속한 가구의 경우에는 12%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 빈곤율로 파악한 청년층의 빈곤실태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는 10분위배율,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GE), 지니계수 등의 분배지표를 통해 살펴보아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 빈곤/분배 지표들이 추정에 있어 가구를 단위로 하는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기타 가구원의 취업 및 소득 현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취업여부나 혼인여부에 따라 독립을 늦추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분배지표가 청년층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가구를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 빈곤가구의 2016년 기준 가구당 취업률이 33%인 데 비해 청년 비빈곤가구는 5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분배지표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의 소비지출 빈곤실태 역시 이와 상황은 유사하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청년층의 소비지출 실태는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이 2016년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구형태별로는 청년부부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상대적 지출 빈곤율은 2009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출빈곤율은 10% 내외로 소득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출수준을 유지하여야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10분위배율이나,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등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하다.

청년층의 빈곤실태가 분배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생활 불안정성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통

해 여실히 드러난다. 빈곤 여부를 통제하여, 청년층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전체에 있어 예외 없이, 빈곤 청년층의 만족도가 비빈곤 청년층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족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만족도 등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빈곤상태 지속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생활만족도의 하락은 추가적인 경제·근로유인 감소 및 사회관계 단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지원이 요구된다.

통용되는 빈곤 및 분배지표는 청년층의 실 생활여건 파악에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청년 생활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실 체감도를 반영한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과 청년층의 육체적 건강 및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를 강화, 청년층과 해당 가구의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제3장은 청년여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이다. 청년들은 일자리 획득이나 가족형성 과정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노력 외 가족 배경이나 젠더 등 통제 불가능한 조건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방향 및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의식을 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청년여성 중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 이전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수준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 및 일자리의 질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격차가 이들 삶의 만족도 및 향후 가족형성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청년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

째, 청년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성별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성별효과를 고려하고, 채용 성차별 해소대책의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고유의 인사관리 권한인 채용절차를 정책적으로 관여하기 쉽지 않으나,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채용절차를 권고하되, 채용상 성차별현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설계에 있어 미혼 및 비혼 청년여성들의 정책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수요가 존재하지만,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중점으로 한 기존 여성정책이 청년여성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세대갈등이나 젠더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부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한 단기 추진방안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문화형성을 통한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청년층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청년층의 졸업 후 지역이동경로 및 취업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청년층의 지역이동을 고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있어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에 비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이 대부분 진학 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지역 선택에 있어서는 고용의 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의 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일자리 질 측면이 담보되어야 지역이동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이동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5장은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가족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청년의 가족형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하였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초혼이행과 결혼 및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세대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층의 초혼이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졸업 후 취업여부가 남녀 청년 모두의 초혼이행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졸업을 유예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가 초혼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의미한 졸업유예 및 학생신분 유지가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 여부가 청년 남녀 모두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일자리 경험이 많고,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이 생애주기 전반에 있어 고용 지속성과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은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의 결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으나, 출산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의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의 선택에 있어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둔 남녀 청년의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현재 취업 중인 미혼 및 기혼 청년들의 출산의향은 이들의 직업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짧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사규모가 클수록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근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직장 경력을 쌓은 후 출산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기혼 청년들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기혼남성의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인 근로시간이 기혼 청년남성들의 출산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지연과 비혼에서 야기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 종료 후 안정적인 생애 첫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경력별 취업 및 전직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의 지속적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적 고용 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안정적 정착이 담보가 될 때, 결혼 및 출산 수행의 의향이 높아짐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육아 및 돌봄 지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보편적 여성 고용 모델의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기혼 남성의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시리즈인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I」(김유빈 외, 2018)은 청년의 고용부진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힘든 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파급된 청년층의 삶의 질 악화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전제로 본 연구 시리즈의 연구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이 청년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이 다시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절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년 정책의 지원범위를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민정 · 이승현 · 권소영 · 강경주 · 김영옥 · 임희정 · 서형도(2019), 「노동 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개발(Ⅱ): 직장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순희(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 (3).
- 권소영 외(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 (4), pp.3~25.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응용 경제』 6 (3), pp.259~289.
- 김기현 · 이운주 · 유선희(2017),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규 · 어수봉(2010), 「대졸 청년층의 경렬변동과 임금효과」, 『경영연구』 25 (2), pp.135~161.
- 김성아 · 정해식(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 김영미(2016), 「계층화된 젊음: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 등」,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4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동그라미재단.
- 김용성(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유빈 · 강동우 · 오선정 · 유동훈 · 이지은(2018),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인순 · 김영택(2017), 「청년층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전망이 결혼, 출산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 『1-19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 (1), pp.57

~70.

- 김창완·오병돈(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 (1), pp.167~204.
- 남미자·김희연·이수지·이주영(2013),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능력개발연구』 16 (3), pp.29~57.
- 류장수·조장식(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 (2), pp.199~218.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가열·천영민(2011),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20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pp.144~161.
- 박성준(2004),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이공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7 (1), pp.55~76.
- 방하남·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 (1), pp.93~126.
- 심윤중·유홍준·박승희·전태인(2005), 『산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안주엽·길현중·김주영·김지경·오선정·정세은(2016), 『일과 행복(II)』, 한국노동연구원.
- 안태현(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35~64.
- 윤윤규·이상호·류장수·박성익·조장식·옥성수·서옥순(2013), 『부산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정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자영(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 (2), pp.159~184.
- 윤진호(1989), 「불안정 취업자층과 이중노동시장」,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3, pp.227~246.

- 이병희(2001),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산업관계연구』 11 (2), pp.153~176.
- \_\_\_\_\_(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 (1), pp.1~18.
- \_\_\_\_\_(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유리 외(2017), 「에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결정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 (4), pp.101~116.
-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7.5),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 임찬영 · 조준모(2006), 「직장이동의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 『제5회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논문집』.
- 장현진 · 이지혜(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 (2).
- 전용석 · 김준영(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동향분석』 2003 3/4분기, pp.223~245.
- 조인숙(2015), 「대졸자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에 있어서 남녀차이」, 『여성경제연구』 12 (1), pp.123~162.
- 주희정 · 김민석(2017), 「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경제 · 사회 · 심리적 요인의 영향 분석」, 『제10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24.
- \_\_\_\_\_(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 (2), pp.59~88.
- 채창균 외(2004), 『청년층 교육 · 훈련과 고용( I ): 교육 · 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49~5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1),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_\_\_\_\_(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17」.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이트(<http://kedi.re.kr>).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영선(2015), 「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  
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관리  
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pp.196~215.

- Arrow, K. J.(1973),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in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s*, eds by O. Ashenfelter and A. Re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33.
- Becker, G. S.(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cago.
- Castel, Robert(1995),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ne chronique du salariat,” Fayard, Paris.
- Coate, S. and G. Loury(1993), “Anti-Discrimination Enforcement and the Problem of Patro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3, pp.92~98.
- Connolly, S., J. Micklewright, and S. Nickell(1992), “The Occupational Success of Young Men Who Left School at Sixteen,”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44 (3), pp.460~479.
- Doeringer, P. B. and M. J.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 Gadecki, R. and D. Neumark(1998), “Order from Chaos? The Effects of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s on Adult Labor Market

- Outcom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51 (2), pp.299~322.
- Golsch, Katrin(2003), “Employment Flexibility in Spain and Its Impact on Transitions to Adulthood,”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7 (4), pp.691~718.
- Grimm, Michael and Noël Bonneuil(2001),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French Women over the Life Cycle, 1935~1990,”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17 (3), pp.235~260.
- Kim, Younga(2015), “Changes in Precarious Employment Among South Korean Women,” *Mathematical Population Studies* 22 (2), pp.101~123.
- Light, A. and K. McGarry(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pp.276~286.
- Lim, So-jung(2017), “‘Bad Jobs’ for Marriage: Precarious Work and the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Kalleberg, A. and S. Vallas eds. “Precarious Work”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 31, Emerald Publishing Limited, pp.399~427.
- Lundberg, S. J.(1991), “The Enforcement of Equal Opportunity Laws under Imperfect Information: Affirmative Action and Alternativ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p.309~326.
- Montensen, D.(1986),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2 (15).
- Neal, D.(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2), pp.237~261.
- Phelps, E.(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 Review* 62, pp.659~661.
- Pissarides, C. A.(2000),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1), pp.34~92.
- Steele, Fiona(2005), “Event history analysis,” ESRC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methods, NCRM Methods Review papers 004, Bristol.
- Topel, R. H. and M. P. Ward(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2), pp.439~479.





◆ 執筆陣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 삶의 질 연구(Ⅱ) :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  
형성을 중심으로

- |           |   |
|-----------|---|
|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26일 인쇄<br>2019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374-7